#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## (주요정책 부문)

2025. 2

국토교통부

# 1. 평가개요

## (1) 중점 평가방향

### □ 적절성 및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반영 유도

○ **난이도 평가항목**에 **상위정책**(국정과제, 업무계획 등)과 **연계** 정도, **결과 성격의 성과지표 설정**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**적절성** 및 **대표성 강화**

- 세부평가기준에 **자평위원·외부 전문가 참여**하는 **성과지표 개선 전문가 검토회의, 과제 목표치의 적극성·신규추진 여부** 등 반영

### □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 평가 반영

○ **정책 수혜자**인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 1,364명*을 대상으로 **성과관리계획 관리과제**에 대해 **정책만족도 조사** 실시('24.12.10~12.20)

* 일반국민: 1,000명 / 전문가(학계, 연구원, 공공기관 등) : 364명

○ **정책 성과** 창출을 위해 **과제목표 달성도**(성과지표의 달성도, 정책효과 발생 정도, 정책만족도) 배점을 **60점**으로 **설정**

### □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자체평가 체계 운영

○ **연말평가**(노력도, 달성도)시 관리과제 **정량지표*** **실적**에 대해 내부 감사관실, 외부 위원회 등을 통해 **중복 검증**하여 **객관성 제고**

* 계획이행의 충실성(추진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), 성과지표의 달성도

- **성과관리과제 수립 체계**를 과 단위가 아닌 **정책관급 단위**로 운영하여, **핵심정책 위주의 관리과제** 구성·추진 및 **정책성과 제고**

## (2) 평가추진 개요

### □ 평가추진 체계

○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,「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」 및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(국조실)에 따라 **자평위 구성·운영**

- 평가의 **전문성**을 제고하고, **효율적인 평가 수행**을 위해 분야별 **소위원회**를 구성하여 운영(3개 소위원회, 21명)

- 각 소위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**이의조정위원회**를 별도로 구성, **소위별 이의신청**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**최종 조정**

### □ 평가방법

○ **자체평가위원회**를 통해 **주기적인 평가 실시**

- 과제 난이도 평가('24.6)→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('24.7) → 과제 이행 노력도 및 과제 목표 달성도 평가('24.12~'25.1)

○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평가항목별 **이의신청**을 받아서 **이의조정위**(각 소위원장 등)에서 **최종**적으로 **조정**

○ **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**에서 최종결과를 **심의 · 확정**

| 자체평가위원회<br>소위원회 평가 | | 이의조정위원회 | | 자체평가위원회<br>최종 심의 |
|---|---|---|---|---|
| 3개 소위원회에서<br>평가실시 | ⇒ | 소위별 이의신청<br>검토 | ⇒ | 자체평가 결과보고서<br>최종 확정 |

□ **평가대상 및 평가지표**

○ **평가대상** :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(총 44개 과제)

○ **평가지표**

| **평가항목** | **평가지표** | **측정방법**(측정기준) |
|---|---|---|
| 과제 난이도 | 계획수립의 적절성 | • 정량화.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(내외부 참여 검토회의 여부)<br>• 민생과제, 국정과제 등 반영 여부 (추진계획 및 지표 반영 여부) |
| | 성과지표의 난이도 | •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<br>•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<br>•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|
| 과제이행 노력도 | 계획이행의 충실성 | • 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|
| |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•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<br>• 여건.상황변화에 대응정도<br>•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|
| 과제목표 달성도 | 성과지표의 달성도 | •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|
| | 정책효과 발생 정도 | •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<br>•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효과 감안 |
| | 정책만족도 | • 일반국민,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실시 |
| 가 점 |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| • 핵심 민생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 |
| | 협업과제 추진성과 | • 부서간 협업 추진계획을 모두 달성한 과제 |

## 2. 평가결과

### (1) 총 평

□ **22개 정책관**(108개 과)* 소관 **44개 관리과제**에 대한 **자체평가 결과,**

* 대변인, 감사관, 기획조정실 직할, 지방청 등 지원부서 제외

○ A등급 2개(4.5%), B등급 6개(13.6%), C등급 7개(15.9%), D등급 13개(29.5%), E등급 7개(15.9%), F등급 6개(13.6%), G등급 3개(6.8%)

| 구 분 | '22년도 | '23년도 | '24년도 |
|---|---|---|---|
| 관련 부서 수<br>(BSC 단위부서) | 본부 등 22개<br>정책관급<br>(115개 과) | 본부 등 22개<br>정책관급<br>(108개 과) | 본부 등 22개<br>정책관급<br>(108개 과) |
| 과제 개수 | 42개 | 42개 | 44개 |
| 지표 개수 | 223개 | 214개 | 184개 |
| 성과지표 목표치<br>평균 달성률 | 91.52%<br>(19개 지표 미달성) | 94.86%<br>(11개 지표 미달성) | 86.96%<br>(24개 지표 미달성) |
| 평균 점수(과제) | 90.64 | 90.81 | 90.34 |
| 최대값-최소값(과제) | 13.62 | 11.81 | 15.22 |
| 표준편차 | 2.56 | 2.85 | 3.27 |

○ **우수 과제**는 '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', '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' 등이며,

○ **미흡 과제**는 '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', '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' 등으로 평가됨

□ 총 44개의 관리과제의 **184개 성과지표**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**평균 달성률**은 **86.96%**로

○ **160개**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**달성**하였으나, **24개 성과지표**의 목표치는 **일부 미달성**

-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법률 개정을 위한 **국회 심의 지연, 이해관계 대립 등 외생환경 변화** 등으로 분석됨

* 다만,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, 소관 상임위 상정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부분 점수 산정(50~90%)

(2) 주요성과

### ❶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(Ⅲ-1-①)

○ **(주택공급 기반 조성)** 수요가 많은 **도심 내**에서 주민의 **자유로운 선택권**에 따라 **우량주택**이 원활히 **공급**될 수 있도록 **규제 혁파**

*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, 특례법 제정 추진, 분쟁조정 전문가 파견 등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

- **장수명주택** 인증제도 인센티브 적용 확대('24.9), **모듈러주택** 인센티브 부여(용적률 완화 등) 추진 등 **고품질 주택 활성화**를 위한 **제도 정비**

○ **(자금조달 지원)** 주택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**정책보증** 공급을 **확대**(HUG: 15조원 → 20조원)하고, **보증여건**도 **개선**

- PF 보증 기준 완화, 융자 한도 확대 등 **非아파트 건설자금** 지원을 강화하고, 공적기관의 **보증 여력 확보**를 위한 **법적 기반** 마련

☞ (**달성원인**) **현장점검**, 업계·전문가 **간담회**, **정책협의체**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세부방안에 대한 **의견**을 **수렴**하고, **이행상황 점검** 및 **개선방향** 모색

### ❷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(Ⅳ-2-②)

○ (**수요자 중심**) **수요**에 **탄력 대응**이 가능한 **DRT**, **전세버스**를 **둘 이상의 시·도**까지 **운행**할 수 있도록 **근거**를 **마련**('24.7, '24.12)

- 또한, **택시서비스 개선**을 위해 인구급증 등 **지역 여건**을 **적기에 반영**할 수 있도록 **제5차 택시 총량제 개선방안** 마련('24.11)

* 수도권에 활성화된 대형승합택시를 지방까지 확산하기 위해 면허권자를 現시장 → 改군수로 확대하는 「여객법 시행규칙」 개정('24.12)

○ (**연계교통**) **GTX-A 개통**에 **대비**하여 지자체, 철도공단, 전문가 등과 **TF**를 **구성**하여 **현장점검** 등을 통한 **연계교통대책 선제적 마련**('24.3·12월)

* 서울시·화성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역사 접근 버스노선 조정 33건, 신설 6건 실시

☞ (**달성원인**) **교통업계 간담회**(3.20), **교통대토론회**(5.2) 등 **현장의견**을 **적극 수렴**하고, **TF 구성·적극행정 제도 활용**으로 **선제적 대응**

❸ **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·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**(Ⅲ-1-②)

○ (**선도지구 선정**) 가장 우선하여 사업이 추진될 **선도지구**를 **선정**함으로써 **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**을 **실체적 사업**으로 **구체화**

- 분당 3개 구역(1.1만호), 일산 3개 구역(8.9천호), 평촌 3개 구역(5.5천호) 등 **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3개 구역 3.6만호 선정**

* (선정과정) 선정계획 발표[5월] → 공고문 공고[6월] → 제안서 접수[9월] → 지자체 평가 및 심사[10월~] → 지자체-국토부 협의[11월] → 선도지구 최종 선정[11월]

☞ (**달성원인**) **제도적 기반 마련***, **상설협의체 운영**으로 **지자체**와 지속 **소통·협업**, **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**를 통한 **지역주민 컨설팅** 제공

*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('23.12 제정)의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('24.4)하고, 기본방침 고시('24.11)

(3) 개선・보완 사항

❶ **국민 안전 강화**

○ (**항공 안전**) 예방중심의 첨단 **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·강화 추진 중**이나, **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** 등으로 **국민 우려** 상존

- **항공사 운영실태**에 대한 **정확한 진단**과 **근본적인 문제점 해결**을 위한 **항공안전혁신 대책 마련** 추진 필요

❷ **행정절차 신속 추진**

○ (**제주 제2공항**) 의견수렴('23.3~7), 총사업비 협의('24.1.6)를 거쳐 사전타당성조사('15) 이후 **9년 만에 기본계획 고시**('24.9)하는 성과

- 다만, **기본설계 착수** 등 후속절차를 **차질 없이 추진**할 필요

○ (**지적관리**) **지적측량 성과**의 **일관성·정확성 제고**를 위해 **제도 개선방안**을 **마련**('24.5)하고, **지적측량수수료 감면**하는 성과

- 다만, 당초 계획한 지연 지적 및 지적재조사 **법령 개정·시행**이 규제심사 보완 등으로 **지연**되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

## (4) 평가결과 종합

| 성과목표 | 관리과제 | 자체평가결과 |
|---|---|---|
| **Ⅰ.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.** | | |
| **1.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.** | | |
| |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| D |
| | ②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| D |
| |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| D |
| | ④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| E |
| **2.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.** | | |
| |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 기반 확충 | B |
| | ②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| G |
| | ③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| E |
| | ④ 중남부 여객·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| F |
| **3.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.** | | |
| | ① 국가·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| F |

| 성과목표 | 관리과제 | 자체평가결과 |
|---|---|---|
| | ②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| C |
| | ③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| B |
| **Ⅱ.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.** | | |
| **1.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.** | | |
| |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化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| E |
| | ②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| C |
| |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| F |
| | ④ 대한민국 어디서나,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| C |
| | ⑤ 항공제작·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| F |
| | ⑥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| D |
| **2.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** | | |
| |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| A |

| 성과목표 | 관리과제 | 자체평가결과 |
|---|---|---|
| | ② 스마트건설·Eng.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| F |
| | ③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,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| D |
| |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| D |
| | ⑤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| E |
| | ⑥ 지적관리 정확·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| G |
| **Ⅲ.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,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.** | | |
| **1.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.** | | |
| |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| A |
| |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·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| B |
| |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| C |
| **2.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.** | | |
| |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| D |

| 성과목표 | 관리과제 | 자체평가결과 |
|---|---|---|
| |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| B |
| |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| E |
| |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| C |
| **3.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.** | | |
| |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| D |
| |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| D |
| **Ⅳ.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.** | | |
| **1.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.** | | |
| | ①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| D |
| | ②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| B |
| **2.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.** | | |
| | ① 누구나, 어디서나,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| D |

| 성과목표 | 관리과제 | 자체평가결과 |
|---|---|---|
| |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| B |
| | ③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| D |
| **Ⅴ.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** | | |
| **1.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.** | | |
| |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| F |
| | ②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| E |
| |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| G |
| **2. 건설현장 및 시설물,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.** | | |
| |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| C |
| | ②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| C |
| | ③ 도로 환경·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<br>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| D |
| | ④ 친환경·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| E |

## 3.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

| I -1-① |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| D |
|---|---|---|

### (1) 평가결과

□ **주요성과**

○ (**국토종합계획**) 인구감소,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 전략 수립을 위해 **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착수**('24.4~'25.12)

* 장관주재 토론회('24.6), 지자체 대상 설명회('24.7), 부문별 이슈도출 등을 거쳐 지침 마련

○ (**초광역권계획**) **데이터 기반 공간구조 분석**을 통해 주요권역, 거점을 도출하여 **지역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**

○ (**도심융합특구**) 도심융합특구 **하위법령을 제정**('24.4)하고 공간계획 컨설팅을 통해 5대 광역시 **기본계획 수립** 및 **도심융합특구 지정**('24.11)

○ (**투자선도지구**) **스마트농업, 모빌리티** 등 **혁신기술 접목**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**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**(7.10)

○ (**지역활력타운**) **8개 부처*** **공동공모**를 통해 은퇴자, 귀농·귀촌인, 청년 등 **지역 수요**를 반영한 **10개 사업대상지****를 선정(5.9)

○ (**민관협력 상생협약**) **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접목**되고, **다부처***와 **연계**된 사업을 **신설**하여 **9개 대상지**** 선정(6.21)

○ (**해안 및 내륙권 발전거점 조성**) **광역지자체 간 연계**를 통한 공동 발전 및 사업 간 시너지 확보를 위해 권역별 종합발전 **시행계획 수립**

○ (**성장촉진지역**) 개발에서 소외된 **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**하고, 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, 발전정도 등을 평가하여 **70개 시·군 지정**

□ **개선보완 필요사항**

○ (**국토종합계획**) 차년도에는 권역별 공청회, 세미나 등 지자체, 관계 부처, 학계 등 전문가 **의견 수렴 계기를 최대한 마련**할 필요

○ (**도심융합특구**) **대도시권**에 **시너지 효과**를 갖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과정에서 **종합적인 계획 수립** 필요

○ (**지역활력타운**)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위한 **다부처 연계 강화** 및 타운의 조속한 준공을 위한 **관련 절차**의 **조속한 이행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국토종합계획 수정, 초광역권 계획 수립, 공모사업 선정 등 대표성 있는 과제로 구성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지자체, 관계부처 등과의 이견 조정이 필요하나, 지원 성격의 업무로서 다른 과제들에 비해 갈등 가능성은 높지 않음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초광역권 권역별 설명회, 국토종합계획 수정 토론회(장관 주재), 도심융합특구 지자체 간담회·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도심융합특구 5개 지방 주요도시 지정으로 향후 9.9조원 투자 기대,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,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7 | |

| Ⅰ-1-② |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철도지하화**)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**종합계획**에 속도감 있게 착수(3월)하고, 민·관·학·연으로 구성된 **협의체***를 **출범**

* 전국 16개 광역지자체, 공공·연구기관, 철도·도시·주택·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(협의체 출범식 : **장관님, 서울시장, 부산시장, 인천시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 참석, 4.3**)

○ (**역세권개발**) 철도역과 주거·상업·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**컴팩트시티**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 완료

○ (**공익사업 확대**) **철도자산**의 **활용도 제고** 및 **공익 가치 실현**을 위하여 **키즈레일**(철도어린이집), **섬섬옥수**(중증여성장애인 취업) 확대 조성

○ (**철도서비스 개선**) **국내 현존 최고속도**(320km/h)의 고속열차인 **EMU-320**의 대국민 네이밍 공모와 주요노선에 **영업운행 투입**('24.5)

○ (**고속철 차량 첫 수출**) 중앙아시아 정상 순방 성과로 **한국형 고속철 차량 총 42량(2,700억원, 250km/h급)**을 우즈벡에 수출('24.6월)

○ (**수주지원 강화**) **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***, **K-철도 홍보관 운영****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수한 **기술력을 홍보**하고, 수주경쟁력 확보

* UAE('24.2월, 10월), 모로코('24.7월, 10월), 베트남('24.7월) 장·차관님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

** 국제철도 컨퍼런스 - 한국관 운영(UAE, '24.10월),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(GICC) - 철도세션 운영(한국, '24.9월), 체코 순방 비즈니스 포럼 - 철도협력 발표(체코, '24.9월)

○ (**국제복합운송**)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하는 한국발 수출화물의 적체 해소를 위해 철송과 해송이 연계된 **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추진**

* (구간) 오봉 →(철송) 부산항 →(해송) 연운항 →(철송) 카자흐 →(철송) 우즈벡 →(철송) 타지키스탄, 약7,100km
(기간) '24.6.13(오봉역) ~ 7.14(타지키스탄), 32일, (물량) 자동차부품 등 컨테이너 55개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철도지하화사업**은 여타 사업에 비해 사업구조가 복합적인 만큼, **지자체·유관기관·민간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**하여 **종합계획 수립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철도지하화, 화물취급역 신설, 해외사업 수주 건수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지자체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며, 열악한 재정지원 환경 속 철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독려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나, 이해관계자 간 이견 대립이 다른 과제들에 비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7% | •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선정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지역별 민생토론회, 지자체 설명회, 컨설팅 등을 통해 철도지하화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<br>• K-철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세미나, 수주전략 회의 등 현장 대응력 강화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7.6% | •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, 가이드라인 마련 일부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100% 국내 기술로 설계·제작한 320km/h 초고속열차인 KTX-청룡 도입 →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로 단축하여 국토발전에 기여<br>•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 등 K-철도 14건 수주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02 | |

| Ⅰ-1-③ |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도시계획 혁신**) **용도지역 제약 없이**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**공간혁신구역 3종** 제도 완비·확산 추진

- 제도완비 공간혁신구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**국토계획법 개정**을 **완료**('24.2)하고 후속 **하위법령·지침 완비**('24.7)

- 확산유도 **선도사업 후보지 선정**(16곳, '24.7)과 계획 수립 **컨설팅 지원**을 통해 **모범사례**를 **조기 도출**하고 **전국적 확산 기반 구축**

○ (**뉴:빌리지 도입**)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**노후 저층 주거지역**의 **정주환경 개선**을 위하여 「**뉴:빌리지***」 사업 신규 도입('24.3.19 발표)

- 신규 제도의 실질적인 **정책적 효과가 빠르게** 나타날 수 있도록 **가이드라인**을 신속히 마련(6월) 하여, 연내 **선도사업 32곳 선정**(12월)

○ (**GB 규제 개선**)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**비수도권**의 경우 **GB 해제기준**에 대한 **획기적 규제혁신** 추진

- 제도개선 **비수도권**에서 **지역 활성화** 등을 위해 추진하는 **전략사업**은 **총량·환경규제**와 무관하게 **해제 가능**토록 **제도개선 완료**(4월)

- 민생규제해소 **GB 내 주거·생활편익 증진**을 위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, 노후·불량주택의 신축 허용 등 **입지규제 완화**(2월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GB 규제 개선**) GB **규제혁신** 방안('24.2)에 따라 GB를 지역의 **일자리 창출의 기반**으로 활용하기 위해 **지역전략사업 선정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도심복합거점 조성,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도시재생, 토지규제 재정비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지역주민, 지자체, 국회, 관계부처 등 다수 이해관계자간 이견 조정·조율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뉴:빌리지 권역별 간담회,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했으며, 공간혁신구역, GB 전략사업 등 신속한 효과 창출을 위해 제도개선과 선도사업 동시 진행 등 적기 대응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4.8% | •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미달성(입법예고 중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공간혁신구역 도입으로 경직적인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, 뉴:빌리지 사업 신규 도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기반 마련 등 새로운 도시개발·정비 패러다임 제공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7 | |

| Ⅰ-1-④ |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스마트시티**) 지역소멸, 기후위기 등 **도시문제 대응** 및 해외진출·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**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**('24~'28) 확정('24.5)

- **데이터 기반 플랫폼도시를** 구현하는 새로운 **스마트도시 사업모델**을 도입(거점1, 강소3) 하고, 소도시 대상 지역 맞춤 스마트 서비스 보급

- **해외수출** 및 **글로벌 네트워크** 구축을 위해 **K-스마트시티** 모델 전수 및 **우수 솔루션 해외실증** 추진(8곳),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개최

○ (**용산공원조성**) 타부처 협업 등을 통해 **다양한 행사개최** 및 **교육·체험 공간 조성**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**국민체감도 제고**

○ (**탄소중립**) 지역 현황을 분석하여 **지역특성**에 맞는 **온실가스 감축 사업**을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(제주, 보령, 노원, 당진) 선정('24.10)

- **'24년 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'25년 신규사업을 확정**(3곳) 하고, **수소도시 고도화** 등을 담은 수소도시 2.0 추진전략 발표('24.11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수소도시**에 대한 **국민 수용성을 확대**하고, **체감도 증진**을 위해 **민관 협력 및 홍보** 지속 강화 필요

⇒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'**수소도시 융합포럼**'을 지속 운영, 성공적인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**전문가 컨설팅** 등 지원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, 용산공원 조성, 탄소중립도시 조성 확대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용산공원 관련 미군, 관계부처, 지역주민,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스마트시티 온·오프라인 공청회,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, 산업계 네트워킹 포럼 등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스마트시티 솔루션 신규사업 14건 추진,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54건 승인을 통해 특례 승인 기업의 투자유치 203억원, 신규 고용창출 520명 등 경제효과 창출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44 | |

| Ⅰ-2-① |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 산업 기반 확충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첨단국가산단**) **기업 입주협약**('24.3)을 통해 충분한 기업 수요를 확보한 **고흥, 울진 산업단지**는 **예비타당성조사 면제**('24.6)

- **용인 산단**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및 인프라 신속 협의 등을 통해 **국가산업단지 지정 완료**('24.12)

○ (**노후산단**) 산업단지 **재생사업 선정**(3곳, '24.8)을 통해 산업단지 내 **인프라** 등을 **확충**하고, 활성화구역 후보지 **신규 선정**(진주)

○ (**캠퍼스혁신파크**)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**1호 산학연 혁신허브**를 **준공**('24.12)하고, 입주기업 모집을 개시

○ (**기업혁신파크**) 사업성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**제도를 개선**('24.8)하고 **선도사업 4곳 선정**(포항, 당진, 춘천, 거제)

○ (**수도권 투자여건 강화**)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 방지, 계획적 정비를 위한 **규제 개선** 및 **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**('24.12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첨단국가산단**) **용인 산단**은 **'25 상반기 내 보상절차**에 **본격 착수**하고, **고흥·울진 산단**도 **국가산업단지**로 **신속 지정** 추진

* 신속예타 중인 5곳(광주·대구·대전·안동·완주)도 `25년 내 조속히 예타 완료 추진

○ (**캠퍼스혁신파크**) 개별 사업마다 **선정 시기**와 **입지 여건** 등이 다름에 따라 **지연 방지**를 위해 사업 단계별 주기적인 **사업 관리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신규 국가산단 조성, 기업 주도 일자리거점 육성,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신규 산단·혁신파크 조성, 수도권 개발규제 합리화 등은 지역주민, 지자체, 관계부처, 사업시행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 간 이견조정 필수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첨단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, 현장방문 및 기업·캠퍼스 혁신파크 등 관련 지자체·기업 등 관계기관 간담회 다수 실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7.5% | • 지방권 국가산단 예타면제 또는 완료 성과지표 일부 달성(성과지표 3곳 중 2곳 달성, 다만, 예타 착수 목표치는 초과 달성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용인 국가산단 승인계획 3개월 단축 등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며,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가 선정(2곳), 시화호 마스터플랜 최초 발표, 노후산단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거점 경쟁력 강화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85 | |

| Ⅰ-2-② |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| G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**혁신도시** 기업 입주자금 및 창업 지원,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 개선등 **기업환경 개선** 및 복합혁신센터 등 **정주인프라 건립 사업 등** 추진

- '23년 말 대비 **입주기업**이 1,089개, **고용인원**이 4,632명 **증가**하였고, **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**도 **상승**하였으며, **정주인구**도 **증가**

| | 입주기업 | 고용인원 | 가족동반 이주율 | 정주인구 비교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혁신도시 |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|
| **증가량**(A-B) | 1,089개 증 | 4,632명 증 | 1.5%p 증 | 865명 증 | 14,060명 감 |
| **'24년**(A) | 4,813개 | 27,842명 | 69.2% (6월) | 236,406명 (6월) | 236,406명 (6월) |
| **'23년**(B) | 3,724개 | 23,210명 | 67.7% (6월) | 235,541명 (6월) | 235,541명 (6월) |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치를 설정(16.8%)하였으나 **비중이 큰 한국전력공사**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계획 대비 **실적 부진**으로 **전체 목표 미달성**

* (전체목표/실적) 16.8%/15.83% ** (한전계획/실적) 1,056십억원/893십억원(15.4% 미달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기존에 지속적으로 상향한 우선구매 목표치에 대하여 향후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별도 연구 및 검토 필요

- 우선구매 취지에 부합하고 도전적 성격이 가미된 목표치 설정방안 강구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증가, 복합혁신센터 준공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B | • 이전 공공기관, 지자체, 국회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나, 성과지표가 다소 소극적 설정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70% | •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관련 지방시대위 심의 요청 지연<br>•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지침 개정 지연<br>• 이전공공기관, 입주기업 직원 등 대상 주택특별공급안 마련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혁신융합캠퍼스와 이전공공기관 주관 오픈캠퍼스 연계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공공기관 노조·지자체 등과 다수 소통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7.6% | •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일부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B | • 입주기업과 정주인구가 일부 증가했으나,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따라 기대만큼의 정책효과는 부족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20 | |

| Ⅰ-2-③ |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적기 개항을 위한 **건설사업·용역 발주 및 계약**

- **가덕도신공항 건축공사(7.31) 및 부지조성공사(10.28)** 기본설계 착수, 접근도로(12.31)·철도(12.30) 건설공사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

- **환경**('24.3)**·교통·재해**('24.11)**영향평가**를 **착수**하여 진행중이며, **국제 복합물류 기능 조기 활성화**를 위한 **연구용역**도 추진중('24.5)

○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사업추진 **전담조직 설립**

-「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」시행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의 **적기 개항**을 위해 **건설공단을 설립**(4.25)하고 **상·하반기 임직원 100명 채용**

○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**민·관 협력 강화**

- 지역주민 및 건설업계, 관계부처(기재부, 국방부 등)와 **지속 협의**하고, **신공항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한 **업무 협약**도 **체결**(12.20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가덕도신공항 **부지조성공사 4회 유찰**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**현장 설명회** 및 **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일정 지연**

- 다만, **원활한 사업추진**을 위하여 **전문가 자문회의** 등을 통해 **계약방식 변경** 등 **추진방향을 변경**하여 **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중**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부지조성공사 유찰**에 **신속히 대응**하였으나, 일부 지연되어 **설계 및 시공과정**에서 **적기 개항**을 위한 **방안** 마련 필요

○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착공을 위해 건설예정지 **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** 등 보상 관련 **갈등 관리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, 접근교통망 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환경단체, 지역주민, 국회, 건설업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 와의 이견 조정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, 전략적인 갈등관리가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2.4% | •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지연<br>•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부지조성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,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차례 진행<br>•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6개월여 만에 공단 신설 추진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5.8% | •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가덕도신공항 건축공사('24.7.31) 및 부지조성공사(10.28) 기본설계 착수, 접근도로·철도 건설공사 발주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 |
| 3-3. 정책만족도 | 7.83 | |

| Ⅰ-2-④ | 중남부 여객·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기본계획**) 항공수요, 시설규모·배치 등 공항 건설계획을 마련하고, 각종 영향평가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

-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기구 구성·운영하고, 항공여객·물류 업계, 지역주민·단체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제고

* 지역 여객·물류·경제단체 및 언론 간담회(4회), 관계기관 협의기구 회의(3회), 주민설명회(4회), 공청회(2회), 전문가 자문회의(3회), 세미나(3회), 워크숍 등

○ (**민군통합**) 최초 민군공항 이전건설 사업으로 민군 공동 기반시설에 대한 유기적 연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설계시공방안 마련

○ (**군공항지원**)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·지원

- 군공항 사업 참여 관련 공기업 협력협약을 체결하고,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」 및 「한국공항공사법」 개정 등 군공항 사업추진 여건 조성

* 공항공사의 사업참여 근거 마련, 지방채 발행 및 주택기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지역 간 협의 지연 등 여러 외부 변수를 감안한 일정 계획 필요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제반 영향평가**) 군공항 기본계획이 기수립*된 후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제반 영향평가를 민항 구역에 대해 실시

*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('22.9), 군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('24.2)

- 향후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민군공항 영향분석·평가 (군용기·민항기 복합소음 영향분석, 조류 이동성 조사 등) 통합 시행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TK신공항 기본계획 수립, 건설 시행방안 마련, 화물터미널 추진방안 마련 등 대표적 과제이나 과정지표 위주로 구성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공항 이전 및 민항시설 배치 등에 있어 관계기관·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82% | • 민·군공항 통합건설 시행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<br>• 신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지연<br>• 기본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구 개최 지연<br>• 총사업비 협의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건의에 대해 전문가 검토 기구 운영 및 국방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<br>• 군 공항 사업 관련 대구시 직접 사업시행에 필요한 신속 법률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'25년 본격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|
| 3-3. 정책만족도 | 7.80 | |

| Ⅰ-3-① | 국가·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제주 제2공항**) 제주도 의견수렴('23.3~7.), 총사업비 협의('24.1~6.)를 거쳐 **사전타당성조사('15) 이후 9년만**에 **기본계획 고시**('24.9)

○ (**새만금국제공항**)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('23.8~'24.4) 이후 **사업 재개**('24.4), **설계심의**('24.5)를 거쳐 **실시설계 착수**('24.6~'25.上)

○ (**인천공항**) 4단계 확장 사업 건설공사 완료('24.10) 및 공항운영개시('24.12)

○ (**공항개발 종합계획**) 5년간의 공항 건설·개선 사항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은 **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**('26~'30) **수립 착수**('24.5)

○ (**공항수용능력**) 수용능력 **산출방식 표준화**, 수용능력 **설정·관리 체계 개선**을 위해 "**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**"(훈령) 개정('24.6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제주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후속절차 추진 시 기본설계 업체 선정 발주서류 검토로 인한 기본설계 착수 지연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'25년초 **제주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착수** 및 기본설계 차질 없이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영종·인천대교 통행료 인하, 제주 제2공항.새만금 공항 등 건설사업 추진 등 대표적 과제로 구성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지자체, 지역주민, 환경단체 등 신공항 관련 이해관계 대립이 매우 첨예한 편이나 성과지표 설정은 다소 소극적인 편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1.6% | •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 미달성<br>•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설계·환경영향평가 착수 일부 달성<br>• 백령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(안) 마련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인천공항 4단계 적기 준공 및 운영을 위해 운영준비단 구성 및 현장점검, 종합시험 운영 등 실시했으며, 공항개발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총 8차례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실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84.8% | • 백령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(안) 마련 미달성<br>•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인천공항 4단계 확장으로 여객 1억명, 화물 630만톤 수용이 가능한 글로벌 메거허브공항의 성공적인 오픈<br>• '25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(5,500→2,000원) 시 연 560억원의 국민 교통비 절감 효과 발생 기대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15 | |

| Ⅰ-3-② |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**(1기 GTX)**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**수서~동탄 개통**('24.3)을 시작으로 **구성역**('24.6) 및 **운정중앙~서울역**('24.12)까지 **개통**

○ **(2기 GTX)** 수혜지역을 최대한 확대하면서도, 1기 GTX 노선을 보완할 수 있는 **2기 GTX**(A·B·C 연장, D·E·F 신설) **확충방안*** **발표**

* A·B·C 연장노선은 관련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협의하여 관련 절차 이행 중, D·E·F 신설노선은 지자체 설명회, 업계 간담회를 개최, 외부의견 폭넓게 수렴

○ **(수도권 광역철도) 대장-홍대선**은 **실시협약 체결**(6.18.) 및 **위례~과천선**은 **민자적격성조사**를 **통과**하여 **신속한 사업 추진**

○ **(지방권 광역철도)** 교통분야 민생토론회(1.25)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 도입 발표 직후, **선도사업**을 **2건*** **발굴**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

* 대전~세종~청주공항을 연결하고 수도권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 민자적격성조사 착수('24.4~),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(대구~신공항~의성)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타 중('24.6~)

○ **(고속철도)** 평택~오송 2복선(400km/h), 인천발·수원발 KTX 사업('26), 호남고속철도 2단계('27) 등 **5개 사업 차질없이 추진**

○ **(일반철도) 서해선**('24.11), **중앙선**('24.12), **동해선**('24.12), **중부내륙선**('24.11) 등 국가간선망 개통, **여주~원주** 복선전철 **착공식 개최 및 장항선, 포승~평택** 등 주요 거점 도시 연결망 **개통**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철도사업은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, 지역민원 등 지연요인 발생, **철저한 공정관리**를 통해 적기 개통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전국 GTX 구축, 수도권·지방권 광역철도 및 간선철도 착공·개통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역 신설, 노선변경 요구 등 철도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, 지자체, 국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4% | • 대장-홍대선 착공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GTX-A 단계별 개통, B-C 노선 착공 등을 위해 TF 발족, 국민 참여 안전점검, 현장소통 등 진행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3.2% | • 착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일부 달성 (5개 사업 중 4개 사업 달성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편의 개선, 향후 1기 및 2기 GTX 개통 시 수도권 출퇴근 30분 및 충청·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기대(참고 : 1·2기 GTX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, 직간접적 경제효과 약 135조원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49 | |

| Ⅰ-3-③ |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도로관리 통합플랫폼**) 개별 운영중인 일반국도 관련 11종의 도로관리시스템*을 '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' 구축으로 통합 관리

* (건기연) 교량, 터널, 포장, 교통량조사, 점용허가, 표지판 등 (국토안전관리원) 비탈면

○ (**도로교통량조사 고도화**) 現매설식 조사 방식의 기술한계 극복 위해 최신 기술(AI 영상분석, 차량번호 인식) 도입해 조사 방식 개선

* 매설식 조사방식 대비 정확도 약 1.5% 향상(97%→98.5%), 유지관리비 등 절감(3백만원/지점) 예상

○ (**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**) 도로분야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·AI 분석 등을 접목·활성화하는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

○ (**방사형 순환망·격자망 구축**) 고속도로, 국도 등 주요 간선도로 29개소 개통으로 균형발전 지원,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

* (개통) 고속도로 6개소, 국도 18개소, 국지도 5개소, (예타면제) 국도 45호선 용인 이동~남동(12.5km)

○ (**민자도로 활성화**) 민간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절차별 가이드라인 마련

○ (**관광도로 지정·운영**) 관광도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정, 운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, '관광도로 활성화 협의체' 구성

○ (**도로사업 절차 개선**) 타당성조사·기본설계 등 도로노선 계획 과정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(案) 마련

○ (**지하고속도로 추진**) 경부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('24.8)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 경인선* 및 수도권 1순환선 등도 예타 등 사업 추진

* '25.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,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예정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도로분야 기술개발 등 다양한 R&D를 추진하고 있으나, AI 등 기술변화 대비 미래도로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R&D 추진 미흡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, 간선도로 착공·개통, 지하고속도로 추진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간 이해 상충, 국민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며, 지자체·건설업계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연관되어 갈등관리 역량이 필수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6% | • 지선·지정국도 및 노선 등급조정(안) 마련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일반국민 대상 도로정책(1천명)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(8,900명), 장차관 현장방문, 간담회 등을 통해 미비점 개선 추진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경찰청과 적극 협의를 통해 안성-구리 고속도로에 120km/h 최초 적용<br>• 포천-화도, 안성-구리, 서부내륙 1단계, 파주-양주, 창녕-밀양 등 주요도로 개통으로 지역간 이동시간 크게 단축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44 | |

| Ⅱ-1-① |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化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수주실적**) 세계적 경기 둔화, 우-러 전쟁, 중동 무력충돌 등 **경제적·지정학적 불확실성** 속에서도 **건설외교, 민·관협력** 적극 추진

- **'24년 해외건설**은 **371.1억 달러**를 **수주**하여 **3년 연속 증가세**(전년 대비 11.4% 증가)를 보이며 **'16년 이후 최대 수주액** 기록

○ (**원팀코리아 확대**) **官 주도 성향**이 강한 주요 진출국에 **고위급 수주지원단** 파견('23년 9회→'24년 11회)을 **확대**하여 **협력체계 구축·확대**

○ (**고부가가치 분야**) **高수익**의 **투자개발사업**에 대한 우리기업의 **관심이 증가함**에 따라 '**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**' **마련**('24.7)

- **'24년 투자개발사업**은 **51.7억 달러**(전체의 13.9%)로 **역대 최대 수준**

○ (**GICC**) **고위급 면담, 1:1 상담회** 등을 통해 **네트워킹** 지원('24.9)

○ (**기업현안 해결**) **수주지원단 활동**(국토부 장관, '24.2)을 통해 **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** 사업 **미수금 문제 해결** 및 **사업 재개**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**상대 국가** 및 **발주처 현지 사정**(경제·사회·정치, 기후·인허가 등)에 따라 당초 전망과 달리 **연내 계약 예상사업**이 **다소 지연**되는 경우 발생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K-City, K-철도 등 **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외교**를 연계, **지역별 맞춤 수주전략**을 추진하여 **해외 진출** 및 **수주 다변화** 지속 지원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해외건설 누적실적,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,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협력국가 및 국내 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과 협력관계 모색도 필요하나, 대부분 기업지원 과제로 국내 이해관계 대립은 높지 않은 편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장차관 주재 현지기업 간담회, 현장방문 등 해외건설 정책방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 진행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정상 순방,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사업(사우디 가스처리시설, 베트남 동남신도시, 우즈벡 고속철도 등)을 수주하여 3년 연속 수주실적 증가<br>* ('21) 306억불→ ('22) 310억불→ ('23) 333억불→ ('24.) 371억불(전년 比 10% 증가) * 누적 1조불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32 | |

| Ⅱ-1-② |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UAM) **시행령·시행규칙**('24.4), **행정규칙**('24.11) **제정** 및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**규제특례**(4건) **마련**('24.11) 등 **제도 구축**

- UAM 상용화 대비 **핵심 기술개발**(R&D)에 착수하고,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**UAM 전용 5G 주파수 세계 최초 결정**('24.9)

○ (**자율차**) 레벨4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임시운행의 연속성을 위한 기업수요 맞춤 규제개선,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등 성과

- 자율차 **성능인증제 도입**('24.2.[법개정]), 자율차 **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**(5년→9년, '24.12[법개정]), **시범운행지구 확대**(17개 시·도 42개소)

○ (**모빌리티 혁신**)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**민간 협력채널 구축**, 규제혁신을 통한 특례 부여, 모빌리티 분야 국제 교류·소통 추진

- **모빌리티 혁신포럼** 운영(전문가 80여명) 및 **모빌리티 혁신위원회** 운영(실증특례 25건 승인), **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** 개최('24.12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산업계 협의**) **최신 기술이 요구되는** 자율주행 · UAM 등 신산업 분야의 특성상 **정책의 적기 추진**을 위해 **수시로 의견수렴** 필요

⇨ 글로벌 선도를 위해 **민간의 기술개발** 및 **사업화 지원 강화**

○ (**국민 수용성**) 자율주행 · UAM의 **안전성에 대한 우려,** 공유 킥보드(PM)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**부정적 인식** 증대

⇨ **안전관리 체계를 확보**하면서 **기술·서비스 고도화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UAM 상용화 제도기반 구축, 자율주행 시범운행 서비스 확대,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기존 운송업계와의 마찰, UAM 상용화에 있어 보안과 관련한 관계기관·지역 주민 반발 등이 우려되어 실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갈등 관리·조정이 필수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6% | • 국가교통위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 마련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UAM 상용화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본 협의체 개최하고, 업계·연구기관 등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<br>• 연속성 있는 실증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4.6% | • 수도권 실증 착수 미달성<br>• 모빌리티 혁신 기술·서비스 발굴 건수 일부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무인 자율차의 임시운행허가('24.6, 상암)로 국내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증 허용<br>•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교환 등 25건 신규 서비스 발굴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15 | |

| Ⅱ-1-③ |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녹색건축**)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**중장기 정책방향**('25~'29)을 제시하는 '**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**' **수립**(12월)

- **공공**건축물 신축 시 **ZEB인증 의무등급**을 **상향**(5→4등급)하도록 '**녹색건축법 하위법령**' **개정**(12월)

- **민간 그린리모델링** 활성화를 위해 **신규 사업모델 마련**, 건물에너지 DB 연계 **ESG금융 지원서비스 구축**(11월) 및 **상설 홍보관 개관**(12월)

○ (**건축혁신**) 건축공간이 스마트기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규제 특례, 인센티브 등을 담은 '**스마트⁺빌딩 지원법**(가칭)' **제정안 마련**(12월)

- 로봇, UAM,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에 특화된 건축공간 구현에 필요한 설계, 시공 등 **스마트⁺빌딩 기술개발 로드맵(안) 마련**(12월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(**경관계획**)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(안)에 대한 **공청회**(12.3)에서 **전문가 대다수**가 경관 용어*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**반발**하여 **설득 필요**

* 청년 경관정책 참여단 운영(8월) 등 일반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'**경관**'이라는 용어 **대신**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'**도시건축 디자인**' 용어 **사용 필요성 제기**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경관계획**)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**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** '25.1분기까지 **마련 필요**

○ (**녹색건축 확산**) 여건 변화에 맞춰 **인증기준 개편**(공공) 및 **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**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**설계기준 강화**(민간) **필요**

○ (**스마트⁺빌딩**) 지원법 국회 통과, 로봇·UAM 친화 건축물 기술개발 착수 등을 통해 **건축공간**이 **첨단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그린리모델링 활성화,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, 스마트빌딩 지원법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녹색건축 확대는 건축주, 수분양자 등의 반발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, 그 외 과제는 의견 대립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2.3% | •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 개관 지연<br>• 「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개정안 마련」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, 스마트$^{+}$빌딩 관련 공청회,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운영,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·정책수요자 의견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6.5% | •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신축 공공건축물의 ZEB 의무등급 상향(5→4등급),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62동 지원 등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2 | |

| Ⅱ-1-④ | 대한민국 어디서나,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MFC 확산**) 새벽·당일배송 확산을 위해 **소형 물류창고**인 **주문배송 시설**의 **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 허용**(2월,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시행)

○ (**물류취약지역 지정**) 서비스 제공 여부, 추가 택배요금 수준, 배송 기간 등을 고려한 **읍·면·동 단위 물류취약지역 지정·고시**(228개, 6월)

- **우정사업본부**와 **협업**하여 배송지연 등이 발생하는 **도서지역**(인천 옹진군) 대상 **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**(10월)

○ (**물류 인프라 확충**)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**인증제**를 통해 '21년부터 현재까지 **53개소 인증, '24년 10개소 인증**

- **중소 물류기업**이 **저렴한 임대료**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접목한 **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(천안) 운영 개시**(8월)

○ (**물류산업 디지털 전환**) 교통혼잡, 배송불가 등 **지역별 물류 문제 해소***를 위해, **디지털 기술**** 기반의 **다양한 실증사업 추진**('24, 5건)

*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·통행거리 단축,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

** 드론 배송, 실시간 적재관리시스템, 저온창고 공유서비스, 주차복합 생활물류센터 등

○ (**로봇배송 실증**) 고밀도 보관이 가능한 **스마트 택배함**과 **배송로봇 기술**을 **연계**하는 **기술 개발** 및 **실증**(R&D, 12월)

○ (**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**)「**항공·해운·물류 발전방안**」을 통해 **물류산업 경쟁력 강화** 및 **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** 방안 발표(3월)

- 공항·항만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을 **세계적 물류거점**으로 육성하기 위한 '**국제물류특구**' 제도기반 마련 추진(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발의, 6월)

* ❶범정부차원의 통합거버넌스 구축, ❷각종 규제완화, ❸충분한 배후단지 공급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물류취약지정 지정·고시,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, 주문배송시설 도입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주거인접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은 국회·지자체·지역주민 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나, 성과지표가 다소 소극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업계 동향 및 건의사항 파악을 위한 물류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, 물류 효율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기업간담회·국제물류산업대전 등 개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도심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 내 도시첨단물류단지 1개소 추가지정(총 2개소) → 대규모 도시물류시설(약 8.6만$m^2$)공급 |
| 3-3. 정책만족도 | 10.00 | |

| Ⅱ-1-⑤ | 항공제작·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저탄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**) 「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하위법령 제정, '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' 발표 및 국적항공사(9社) 자발적 참여를 위한 MOU 체결

○ (**국내 제작·정비산업 활성화**) 항공부품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일본 항공당국과의 정비조직인증 분야 업무약정 체결

○ (**ICAO 이사국 상향진출 기반 마련**) ICAO 국제회의 국내 유치* 및 각종 ICAO 회의** 대표단 파견 등 국가 신인도·위상 제고

* ICAO Legal Seminar(4월), ICAO ATMRPP 회의(4월),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(11월) 등

** 아·태 항공장관회의, 아·태항공청장회의(DGCA), 한·미·일 항공교통안전협력회의 등

○ (**ICAO 안전평가 선제적 대응**)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국제업무 관리지침' 제정,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구축·운영 및 워크숍 개최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동 관리과제는 항공제작·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, 당장 가시화되는 정책효과 발생정도 미미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한일간 정비분야 업무약정 체결, UAM 기체 실증비행 허가, ICAO 등 국제회의 유치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UAM 실증비행 허가는 사업자와 정부간 규제범위.강도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며, SAF 확산은 항공사 등과의 이해 조정이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국적사 SAF 혼합급유 상용운항 자발점 참여 유도를 위한 업계 소통 강화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항공부품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국산화 부품 추가 발굴 등 제작산업 활성화<br>• UAM 기체의 안정성 확인 및 실증비행 허가로 K-UAM 선점 기반 마련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56 | |

| Ⅱ-1-⑥ |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기술 경쟁력 확보**)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**미래 핵심 기술** 조기 확보를 위한 **중장기 공간정보 R&D 로드맵** 수립 완료

☞ '25 ~ '34년 3,600억원 규모 기술개발로 국내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
○ (**데이터 개방 확대**) **공개제한 공간정보**(고정밀·고해상도 등)를 **업종 제한없이 민간기업이 활용이 가능**하도록 **법률 개정**

☞ (기존) 위치정보 사업자, 공간정보 사업자로 한정 → (개선) 모든 사업자

○ (**창업기업 성장**) 공간정보 융·복합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**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**하여 **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동력** 마련

☞ '24년 지원기업 매출 43억원, 특허·상표·디자인등록 25개, 투자유치 22억원

○ (**해외진출 지원**) K-GEO Festa 개최(11.6 ~ 8), 인터지오 참여(한국기업관 운영)을 통하여 국내기업 홍보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☞ 해외 바이어와 국내기업 비즈니스 상담 : (K-GEO Festa) 53건, (인터지오) 154건

○ (**인재 양성**) 공간정보 SW·프로그래밍·DB 구축 등 **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 제공**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양성

☞ 공간정보 특성화교 배출인력 전년대비 약 25% 증원('23년 580명 → '24년 726명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공간정보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예산(1.5억 원/연) 규모가 작아 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한계

⇨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공간정보 R&D 로드맵 수립, 공간정보 접근성 확대,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데이터 공개 관련 보안당국, 지자체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산학연 간담회, 공청회, 국제콘퍼런스 개최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간정보 디지털 전환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공간정보 품질관리 평가를 통해 정보 오류율을 크게 개선(3.38% → 0.49%)하고, 공간정보 오픈 API를 활용하여 총 710개(누적)의 서비스 구축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2 | |

| Ⅱ-2-① |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| A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경기보완**) 침체된 **건설·부동산** 경기 **활력 회복**을 위해 **PF 유동성 공급** 확대, 공공 공사비 **적정 단가·물가** 반영 등 **경기회복 대책**[*] 발표

* (1.10) 건설경기 보완방안, (3.28)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, (12.23) 건설경기 활력 제고방안

○ (**위기대응**) 태영(16위) 워크아웃('23.12) 등 **건설사 구조조정**에 대응하여 **신속대응반 구성**(1월~), **주요 사업장** 및 **건설 금융·실물지표 점검**

* 수분양자·협력업체 불안해소 및 지원(대금직불, 금융지원 등)을 위해 애로신고센터 운영('24.1~)

○ (**공사비 현실화**) **공사비 급등**에 따른 **대형공사 유찰** 등에 대응하여 기재부와 **합동작업반**을 통해 **공사비 제도개선방안**[*] 마련(12.23)

* (일반관리비) 30년간('89~) 고정된 수치 개정(50억 미만 : 6→8%, 50~300억 : 5.5→6.5%)
(낙찰률) 순공사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상향(100~300억 : 3.3%p↑, 300억↑ : 1.3%p↑)
(물가기준)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, 물가 급등기에는 공사비지수와 평균값 적용

○ (**공사비 안정화**) **자재비** 안정화, **인력수급** 안정화, **공공조달**(관급자재) 비효율 개선[*] 등을 포함한 「**공사비 안정화 방안**」 마련(10.2)

* 주요 공공공사는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위탁없이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 허용, 관행적 납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기한별 계약불이행 패널티 부과 등

○ (**PF 개선**) 건설사가 과도하게 부담 중인 **책임준공**[*] 개선방향, **수수료**[**] 개선방향 등을 포함한 「**PF 제도개선 방안**」 마련(11.14, 금융위 협업)

* (책임준공) 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, 손해배상(채무인수) 범위 합리화
** (수수료) 항목을 32개→11개로 통합·단순화, 용역제공 없는 패널티 수수료(분양률 미달) 폐지 등

○ (**불법행위 단속**) **상시단속체계**를 통해 **의심현장**을 **발굴**·지속 **단속**[*] 및 **지자체 처분** 요청, 불법행위 **신고 활성화**를 위한 **신고포상금액 확대**[**]

* 1,851개 의심현장에 대해 708건 적발, ** 50→200만원('24.3월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하도급대금 보호**를 위해 **지급 보증 면제사유** 축소 등 **원도급사 구조 조정**시 **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 강화 방안** 검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PF보증 신규 도입, 건설경기 회복, 불법행위 근절, 건설인력·자재·기계 관리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건설 노조, 건설업계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 필수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0% | •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연<br>•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건설경기 보완, 공사비 안정화·현실화 등을 위해 수차례 업계 및 관계부처 간담회, 실무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<br>• 불법행위 단속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업계·노조 등과 수차례 간담회 실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공적보증 확대, 공사비 안정화·현실화 노력 등을 통해 '24년 수주가 전년 대비 7% 상향되었으며,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적극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08 | |

| Ⅱ-2-② | 스마트건설·Eng.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업계·전문가 **릴레이 간담회**, **검찰청·발주청** 협업 등을 통해 **위원 선정**에서부터 **심의 방식**까지 포괄하는 '**입찰제도 혁신 방안**' 마련

○ 자재반입 불편, 차량 통행 및 지하공사 등 **건설현장**의 **여건**을 충분히 **반영**할 수 있도록 **직접공사비 보정기준**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**세분화**

- 아울러,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**콘크리트 품질확보**를 위해 강우 시, 한파 시 및 현장양생공시체 등 **강화된 품질확보 기준** 마련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**업계 영향력**이 **직접적**인 종심제 **평가지표 개선** 등은 **객관적 지표** 발굴 및 **시뮬레이션**, **의견조율***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**지연 달성**

* 평가지표안 마련(10.29.), 사전 의견수렴(11.1.), 업체 공식 설명회(12.16, 52개 업체 참여), 공식 의견조회(11.25.~12.3.), 종심제 심의 참관(11.15 LH, 12.18. 도공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제도개선**한 내용들이 **건설현장 및 입찰 과정**에서 **올바르게 적용**될 수 있도록 **교육, 모니터링** 및 현장여건에 맞춰 **제도개선 지속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육성, 가격입찰 후 PQ 평가대상 확대,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B | • 업계 비용부담, 발주처 안전검증 부담 등이 있어 의견수렴·조정 작업이 필요하나, 지원 목적의 과제로 이해관계 대립은 낮은 편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76.3% | • BIM 교육지원사업 추진 지연<br>• BIM 성과품 인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지연<br>• 청년 가점 등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미달성<br>• 건설엔지니어링 BIM 대가기준 개정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정책 간담회, 강소기업 간담회 등 추진<br>•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필요성 증가에 따라 민간 주도의 협의체(건설동행위원회) 출범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 현장 확대('23년 23.5% → '24년 29.0%), 특허 출연 증가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15 | |

| Ⅱ-2-③ |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,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플랫폼 관리방안 마련**) **물류분야 플랫폼 업종 신설**, 이용자 보호 관련 플랫폼 업체의 **책임 부여** 등 **제도화 방안** 마련 및 **홍보실시**(12월)

○ (**화물운송시장 불법행위 개선**) **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고** 지입료만 수취하는 운송사의 **처분* 강화**를 위한 **화물자동차법 시행령** 개정(12월)

* (처분기준) 사업정지 10일, 20일, 30일 → 즉시 감차

- 추가로, **운송사**가 **차주**에게 **부당하게 금전**을 **요구·수취**하는 **행위***를 금지하고 **위반 시 처분**할 수 있도록 **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**(12월)

* 지입계약을 명목으로 금전요구, 계약 종료 후 차량 명의이전을 명목으로 금전요구 등

○ (**화물차 안전관리**) 경찰청, 도로공사, 교통안전공단 등 **관계기관 합동**, 과적·적재불량 등 **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시행**(4~11월)

* 서평택TG 등 14곳 단속시행, 189대 점검, 181건 적발, 행정처분 등 조치

○ (**통합행정 시스템 구축**) 통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**ISP 수립**(11.28), **법적 근거 마련**을 위한 **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발의**(11월)

○ (**배달업 안전강화**) **배달 안전교육 협의체**를 통해 실습형 **안전교육 실시**(TS, 플랫폼 업계), **온라인 교육 콘텐츠** 개발(TS)

- **전문강사 양성**(42명), **신규 입사자**(253명) 및 **재직자 교육**(5,209명)

○ (**배달공제상품 출시**)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완화,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**공제조합 설립**('23.6), **보험상품 출시**(6월)

○ (**휴게시설 확충**) **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**('25~'29)을 통해 휴게시설 후보지 및 단계적 확충계획 등 발표(12월)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화물차 전국번호판 도입,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, 배달업 공제보험상품 가입률 제고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표준운임 가이드라인, 화물차 공급규제 개선은 운수사·차주, 화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 난이도가 높음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배달업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(경찰, 플랫폼, 종사자단체 등) 협의체 구성<br>• 표준운임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화주단체 등 의견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8.7% | 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미달성(행정예고 완료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관계기관 합동 화물차 단속을 통해 적재불량 차량 적발 등 교통안전 강화*<br>* 서평택TG 등 13곳 단속시행, 180대 점검, 160건 적발, 행정처분 등 조치<br>•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보다 최대 45%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 출시, 6개월여만에 상품 가입 3.9만건 가입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24 | |

| Ⅱ-2-④ |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신수요 창출

- (국제선 네트워크 확대) 인도네시아, 몽골, 카자흐 등 운수권을 주 102회·주1만석 증대*

* (인니) 여객 주28회, (몽골) 여객 주9회, (카자흐스탄) 여객 주16회, 화물 주20회

- (항공사 경쟁력 강화) 운수권 확대(항공 자유화) 및 슬롯 배분 등을 통해 FSC의 독과점 노선에서 LCC 신규진입을 지원

○ KE·OZ 기업결합 대비 및 이용자 보호 강화

- 결합 후 과도한 운임상승이나 마일리지 통합 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력 강화*를 통해 철저히 대응

* 관계부처합동 기업결합 후 항공산업 독과점 관리 및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('24.12월)

- (소비자 권익제고) 월간 소비자리포트 창간('24.7), 항공권 미사용 시 환불 권리(미환불금 6천억원/10년) 보호를 위해 항공사에 고지의무 부여('24.10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제도개선 지연) "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"은 개정안을 조기 마련('24.4월) 하였으나 규제심사 등연으로 지연 개정(9.26, 당초 8월)

- 하지만, 변경된 제도를 항공사업자가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개정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조치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국내공항의 허브기능 강화, 항공회담 개최, 유류할증료 적정성 점검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운수권 확보를 위한 상대국 전략적 대응,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1.1% | • 한-프랑스, 카자흐스탄 등 항공회담 개최 보고 대상자 장관→실장으로 격하<br>• 항공교통 이용자보호기준(고시) 개정 지연<br>• 운항시각 정책위원회의 인천공항 슬롯 확대 심의·의결 지연<br>• 슬롯전략배분 기준 등 「운항시각 배분규칙」 개정 미달성(방침 완료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항공기 지연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, 항공사 간담회 등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검토<br>• KE-OZ 기업결합 관련 EU의 시정조치 이행 지원을 위한 항공회담(프랑스) 진행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항공사 사업계획 전면 조정('24.4)을 통해 지연율 대폭 개선(4월 지연율 전년대비 5.4% 감소)<br>• 코로나 이전 대비 국제선 106% 회복, 전년 동월('23.10) 대비 국적사 취항 국제여객 노선 수 19% 증가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65 | |

| Ⅱ-2-⑤ |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항공MRO, K-드론 산업 육성 등 신항공 생태계 구축

- LCC 대상 부품 공동구매 사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('24.3), 항공정비 업계 간담회('24.6)를 통한 항공 MRO육성 지원

- 드론 박람회 성공적 개최('24.5), 드론배송사업 개시('24.8~), 드론공원 지정을 위한 드론법 개정('24.2) 등 신공항 생태계 육성

○ 지방發 국제선 확대,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 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허브기능 강화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항공 MRO 활성화를 위한 관세감면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(11.13)에 상정된 후, 소위를 거쳐 1년 연장으로 합의

* 관세법 일몰기간 5년 연장안을 발의(기재위 여야 간사)

- 이후, 연말 탄핵 정국 등 최근 국회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곤란한 외적요인으로 인해 관세법 개정이 '25년으로 미뤄짐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법률 개정 조속 시행) 법률안 개정의 경우 개정안 마련 이후 국회 등에 외부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, 목표연도에 개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상반기 등에 절차 추진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방공항 활성화, MRO 산업 성장기반 마련, 드론 조종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 등 대표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대부분 지원 과제 위주로, 이해관계 대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일부 과제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설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6.2% | •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신설 미달성<br>• 항공물류단지 기업 유치 및 물동량 성과 보고 미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MRO 관련기관 협의회 운영, K-드론 기업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미래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적극 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8.7% | • 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미달성(개정안 발의 완료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14개 지자체, 50개 지역(섬 32개, 공원 17개, 항만 1개)에서 K-드론배송 상용서비스(생필용품, 휴대폰 등 3-5kg, 배송비 3-5천원) 실시<br>• 항공산업 Job Fair, 채용설명회 등으로 항공 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35 | |

| Ⅱ-2-⑥ | 지적관리 정확·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| G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지적관리 제도개선**) **지적측량 성과**의 **일관성·정확성 제고**를 위한 **5대 제도개선 방안**을 **마련**(5.30, 장관님 보고)하여 **법령 개정 추진**(12월)

- **지적측량 성과검사** 시 **허용**되는 **오차 범위**를 **축소**하기 위해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 개정(안)을 마련하여 공포·시행('24.12)

* (개선내용) 도면 축척 1200분의1 지역(36cm → 24cm), 2400분의1 지역(72cm → 48cm), 3000분의1 지역(90cm → 60cm), 6000분의1 지역(180cm → 120cm)

○ (**지적재조사 기능개편**) 국고보조금 조기 교부로 **사업 단축**(지적소관청-책임수행기관 위탁계약: '23년 대비 10일, 민간대행자 사업착수: '23년 대비 19일)

- **민간 지적측량 산업계 활성화**를 위해 책임수행기관(LX)간 업무공정비율 개선*, **민간기술 능력배양**을 위한 드론경진대회 개최('24.5)

* 업무공정비율: (민간) 35% → 40%, (LX) 60% → 53%, (공통) 5% → 7%

○ (**국민 부담 경감**) 지적측량 수수료 개편에 따른 **대국민·이해당사자간 공청회 개최** 및 호우 등 재난선포지역 **지적측량수수료 감면** 추진

* 공청회(국민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, 산업계 등 110명, '24.11.14.) / 수수료 감면(148건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지적 및 지적재조사 **법령·규칙·규정 개정**을 위해 **조기**에 **공포·시행**까지 도전적 목표를 **계획**했으나, 규제심사 보완 요구 등으로 **불가피 지연**

- 당초('24.9월) 계획한 규칙 1건('24.12월), 규정 2건('25.1월) 완료 당초('24.12월) 계획한 법 1건('24.12월) 규정 2건('24.12월)은 추진 중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현재 당초계획 보다 지연 중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의원입법 발의, 「지적확정측량규정」, 「GNSS측량규정」 개정·공포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지적측량 허용오차 인정범위 축소, 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,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효율성 강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관계기관, 측량업체, 지자체, 토지소유자 등과 협력이 요구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3.6% | • 「지적재조사특별법」 개정(안) 발의 미달성(개정안 의원실 제출 완료)<br>• 「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개정(안) 마련 및 시행」 미달성(규제심사 중)<br>• 지적측량 시행규칙/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·공포 미달성(입법예고 완료)<br>• 수치등록 대상확대 법률 개정(안) 발의 미달성 (개정안 의원실 제출 완료)<br>• 지적확정측량규정/GNSS 측량규정 개정·공포 미달성(개정안 방침 완료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지적측량 업무확대 및 개선 등을 위한 업계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,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현장방문 등 적극 의견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약 5억원 감면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22 | |

| Ⅲ-1-① |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| A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**(주택공급 기반 조성)** 수요가 많은 **도심 내**에서 주민의 **자유로운 선택권**에 따라 **우량주택**이 원활히 **공급**될 수 있도록 **규제 혁파**

- 재건축 **패스트트랙** 도입, **특례법 제정** 추진, **분쟁조정** 전문가 파견 등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**규제에서 지원으로** 확실하게 **전환**

*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,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 등 운영방식 개선

- 1~2인 가구 수요가 높은 **도시형 생활주택** 주차장 기준 완화('24.4), 주거용 **오피스텔** 발코니 설치 허용('24.2) 등 **건축규제 완화**

○ **(자금조달 지원)** 주택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**정책보증** 공급을 **확대**(HUG: 15조원 → 20조원)하고, **보증여건**도 **개선**

- PF 보증 기준 완화, 융자 한도 확대 등 **非아파트 건설자금** 지원을 강화하고, 공적기관의 **보증 여력 확보**를 위한 **법적 기반*** 마련

* HUG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(5조→10조), 보증 총액한도 상향(자기자본 70배→90배)

○ **(주택품질 향상)**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추진 등 **성능검사 실효성** 제고, **융자지원사업** 내실화 등을 통해 **층간소음 저감**

- **장수명주택** 인증제도 인센티브 적용 확대('24.9), **모듈러주택** 인센티브 부여(용적률 완화 등) 추진 등 고품질 주택 활성화를 위한 **제도 정비**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공급 대책 마련 후 본격적 **정책효과 발생**까지는 **시차**가 **존재**함에 따라, 거시 여건 악화로 인한 인허가 지표 등 **공급 위축** 계속

* '24년 인허가(11월 누계)는 273,121호로 전년 동기(331,263호) 대비 17.6% 감소

- **정책 효과**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**「재건축 특례법」** 등 주요 법안 제·개정을 위해 **국회 협의** 등 총력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노후계획도시 정비하위법령 제정, 선도지구 선정, 이주대책 지원방안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조합과 조합원, 시공사와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 대립이 매우 첨예한 부분이며, 층간소음 해소 역시 시공사 규제 강화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어 전략적인 접근과 의견 조율이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9.6% | • 「주택건설기준규칙」 개정안 마련 방침결정권자 장관→실장으로 격하에 따라 일부 감점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업계·전문가 간담회(6회)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대책 마련 및 산학연관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택품질 제고 노력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PF대출 보증 지원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택 착공 실적 약 34% 증가*<br>* 착공실적(만호) : ('23.1~10) 16.3 → ('24.1~10) 21.8, (전년동기比 + 34%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1 | |

| Ⅲ-1-② |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·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제도기반 마련**)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('23.12 제정)의 **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법령**을 **제정**('24.4)하고, **기본방침*** **고시**('24.11)

* 10년간의 국가 정책방향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

○ (**선도지구 선정**) 가장 우선하여 사업이 추진될 **선도지구**를 **선정**함으로써 **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**을 **실체적 사업**으로 **구체화**

- 분당 3개 구역(1.1만호), 일산 3개 구역(8.9천호), 평촌 3개 구역(5.5천호) 등 **1기 신도시 선도지구 총 13개 구역 3.6만호 선정**

* (선정과정) 선정계획 발표[5월] → 공고문 공고[6월] → 제안서 접수[9월] → 지자체 평가 및 심사[10월~] → 지자체-국토부 협의[11월] → 선도지구 최종 선정[11월]

○ (**지원방안 마련**) **행정, 금융 등 다양한 분야**의 **다각적**인 **지원방안**을 **마련**하여 성공적인 **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반 조성**

- (**이주·교통지원**) **1기 신도시**의 **신속**하고 **질서**있는 **정비**를 **뒷받침**하기 위한 **이주지원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**('24.12)

- (**금융지원**) 공사비 가격 급등, PF 자금경색 등 **외부여건**에 **대응**하고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**맞춤형 금융지원 방안*** 마련('24.11)

*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, 통합정비 특화 보증상품,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등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(**1기 신도시**) **'25년 중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**을 **지원**하고, 선도지구 이외의 **순차정비방안 마련**으로 **차질없는 사업 추진 필요**

○ (**전국 확산**) 본격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**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**를 **선정**하고 **주민컨설팅 지속**(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) **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노후계획도시 정비하위법령 제정, 선도지구 선정, 이주대책 지원방안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주민 간, 지자체와 주민 간,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가 심한 편이며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조율 등이 매우 중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전국 단위 상설협의체를 통한 지자체 수시 의견수렴, 지자체 대상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수시 개최, 현장방문, 지역주민 상담 등 매우 적극적인 현장 의사소통 진행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제안서 15.3만호 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선도지구 3.6만호 발표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9 | |

| Ⅲ-1-③ |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공급 확대**) 인허가 목표(14만호) 대비 **목표대비 93%**(13만호) **이행, 지난해 대비 실적 1.7배 확대, 지난 10년간 인허가 실적 중 최대를 기록**

* LH 민참사업 2.4만호를 추진하여 목표(1.5만호) 대비 160% 초과 달성

- **착공도 공급 저조 우려에 따라 확대계획(5.2만호)**을 **수립**하여 **5.3만호** 착공, 지난해 **실적**(1.9만호) 대비 **2.8배 수준**으로 **대폭 확대**

- **서울** 등 **그린벨트**를 활용하여 **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**('24.11)

○ (**3기 신도시 등**) 5개 지구 1만호 주택 착공 및 **인천계양 본청약**(9월) 최초 진행, **과천과천** 및 **광명시흥** 지구 **지구계획 수립**

- 사업 조기화를 위한 **신도시 리츠 참여 기관 확대**를 위한 **제도 기반 마련**(시행령 개정), **지방공사 참여 확대 지원**(출자관련 규정 보완)

○ (**도심복합사업**) 공공법령 개정을 통한 **일몰 연장**('24.9→'26.12) 및 **1.5만호 지구지정**, 민간**도심복합개발법 제정** 등 **사업 시행 기반 마련**

○ (**소규모정비**) **사업 활성화**를 위한 요건(동의율, 노후도) 완화, 절차 간소화 등 **제도개선, 기금융자 지원 확대**(300억→500억, 5년→7년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공공주택 공급**)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**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상반기**에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, 사업 조기화를 통한 **공급 분산 필요**

○ (**3기 신도시**) 수도권 공공택지 **주택 착공** 및 **분양 본격 확대** 필요

○ (**소규모주택정비**)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**사업성 악화**에 대응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**추가 지원방안 모색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공공주택 공급 확대, 도심복합지구 지정,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지자체, 지역주민,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며, 도심공공복합사업·소규모 정비 등은 국민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어 민원 및 사업주체간 대립 등이 심하므로 적극 관리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6.8% | • '25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(안) 마련 감점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주민, 이해관계자 간담회, 민관공 협의체 운영 등 수차례 설득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 적기 공급,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및 장차관 현장방문(10회) 수차례 진행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공공주택 착공 실적 전년 대비 2.5배 상향, 3기 신도시 첫 분양 완료(인천계양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61 | |

| Ⅲ-2-① |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임대차 제도 합리화) **임대차 규제**의 부작용 해소 및 **시장 유연성**을 회복하고, **임차인**의 **정보 접근성**을 향상하여 **전세사기 예방**에 기여

- 연구용역을 통해 **임대차2법 시장영향** 분석·진단 등 **시장 혼선**을 **최소화**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**합리적 개선방안 마련**

- **안심전세앱** 고도화, **악성임대인** 공개, **선순위 권리확인** 개선*, **금융권**과 **계약 정보 연계** 강화 등 임대인-임차인 간 **정보 비대칭 해소**

*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열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

○ (맞춤형 주거 지원) 청년, 신혼부부 등 **무주택 서민**의 **주거비 부담**을 **경감**하고 **내집 마련 기회**를 **확대**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

- **신생아 특례대출**('24.1) 등 정책대출 강화, **신혼부부 특공** 확대, **신생아 우선공급** 신설('24.3) 등 청약제도 개선으로 결혼·출산 지원

- 높은 이자율, 모기지 연계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의 **청년주택드림통장** 출시('24.2), **청년월세** 확대('24.4) 등 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확대

○ (공동주택 관리 강화) 관리비리 근절과 입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**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**(K-apt) **관리비등 공개 의무대상** 확대('24.4)

* (旣) 의무관리대상(300세대, 승강기or중앙난방 150세대 이상) → (改) 100세대 이상

- **시공하자 조치기한** 설정('24.8), **중대한 하자** 사건 **패스트트랙** 도입('24.3), **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** 마련('24.5) 등 하자 최소화 노력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주택임대차 규제 개선에 대해 **사회적 공감대**를 기반으로 **충분한 공론화 과정**을 거쳐 법령 정비 등 **신속한 제도개선 추진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,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, 주택구입·전세자금 지원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, 지자체·관계부처·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폭넓은 의견수렴 및 조정이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8.1% | • 「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」 개정안 마련 지연 |
| 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안심전세앱에 대해 청년자문단, 토크 콘서트 등 수차례 행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관심도 제고<br>• 임대차2법 관련 전문가, 업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 대출 실적 증가('23, 47조원 → '24.1~11월, 49.8조원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6 | |

| Ⅲ-2-② |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공공임대 공급**) 서민·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**전년대비 5.8만호 확대**하여 **'24년 공공임대 13.6만호 공급**

-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, 든든전세,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신규 도입하여 중산층·서민층 주거안정 유도

○ (**공공임대 질적 제고**) **공공임대 노후화***에 선제적으로 **대응**하기 위해 **맞춤형 관리전략 수립** 및 **재정비 시범사업 계획 승인 완료**(12월)

- 「**제2차 기본계획**」('24~'28)을 수립하여 냉방설비, 침수방지시설 등 **신규 항목 추가 반영** 및 **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신규 추진**

- 건설형 특화주택 체계적 운영을 위해 '**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**' 제정(7월)·개정(12월) 및 **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최초 실시**

○ (**출산가구 지원**)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年 **12만호**(공공분양 4만, 공공임대 6만, 민간분양 2만) 공급하는 **신생아 특별·우선공급 신설**(3월)

- 공공임대 **재계약 소득·자산 기준폐지*** 및 **평형 상향** 지원, **장기전세주택** 소득·자산기준 개선 추진(7월~)

* '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·자산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

○ (**민간임대 활성화**) **단기**(非아파트, 6년) **등록임대 도입**('24.12월)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**신유형 장기임대* 도입** 발표('24.8월)

*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(100호 이상), 장기간(20년 이상) 안정적으로 운영

- 공공지원민간임대의 **수익률 산정기준** 개선, **공사비 인상**기준 개정 등을 통해 **출자승인**(착공) **실적 증가**(('23년) 5,245호 → ('24년) 11,171호)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('24.10)되었으나, 국회에 계류(상임위)되어 있어 조속히 법안 통과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질적 개선,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재정 수반 과제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,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은 세제 인센티브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업계 간담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, 신축매입 확대 등 적기 정책 반영<br>• 지역 여건에 따른 주택공급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 신설 및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전담 부서 신설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LH 든든전세(前 공공전세 잔여물량 전환) 1,600호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(든든전세 유형) 774호 입주자 모집 완료<br>•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및 신규 출산·다자녀 가구 우선공급으로 저출생 극복 기여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97 | |

| Ⅲ-2-③ |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주거약자 지원) **고령자복지주택**공공임대 확대(1→3천호)*, **실버스테이**민간임대 도입 등 저소득에서 **중산층도 입주가능**토록 **공급체계 개선**

* (기존) 건설임대 1천호 → (개선)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리모델링 각 1천호, 총 3천호 공급

-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『**주거약자법 시행령**』 개정(7월)을 통해 **좌식샤워시설** 등 제공시설 **추가** 및 지체장애까지 확대

- **취약계층 밀착지원**을 위해 정보제공·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 **주거복지센터 확대**('23년 59개소 → '24년 63개소) 및 **중앙지원센터 설립**(10월)

○ (안전한 주거환경 조성) **주거급여 수급가구** 중 **침수우려가구**에 대한 **추가지원 법제화**(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, 1월)

- **쪽방·고시원·침수우려 반지하가구 등**에 안정적 환경 제공을 위해 **공공임대·민간주택 이주지원 확대**('23년 1만 → '24년 1.2만)

-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**대상 확대** 및 **거주기간 연장**을 통해 **주거취약계층**에 대한 **주거지원**을 **강화**(10월)

○ (주거비 확대) **주거급여 대상**을 **'24년 기준중위소득 48%**로 **상향**하여 **148만 가구** 지원(목표 145만가구) 및 지원금액 **1.1~2.7만원 인상**

-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·월세 기준 등 **거주요건 폐지** 및 **지원기간 연장**(12개월→24개월)하여 2차 청년월세 신청 접수('24년 17.3만명 지원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지자체 매칭예산 미확보로 주거복지사 배치 지연,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심사 절차 지연 등 외생변수 발생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**취약계층 밀착지원**을 위해 **지자체 영구임대** 단지 내 **주거복지사 배치 확대**를 위해 지자체·지방공사 **협의** 및 사업 **홍보 지속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고령자·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,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재정당국,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, 취약계층 이주지원을 위해 거주민,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및 협의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특화임대 공모사업 설명회, 사업후보지 현장방문 등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 및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(연 1→3천호)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89.4% | •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 미달성(법제처 심사 중)<br>•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배치 목표치 미달성<br>• 비정상거처 버팀목 대출 실적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 확대('23, 중위소득 47% → '24, 48%) 및 지원금액 인상(1.1~2.7만원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85 | |

| Ⅲ-2-④ |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주거안정 지원**)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**10년 무상 거주** 지원 등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**종합대책 마련**(5.27) 및 **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**(9.10)

○ (**금융 지원**)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어 **피해자 부담 경감**

- 피해자로 결정 시 **계약만료 전**이라도 **버팀목대출**을 **허용**(6.3)하고 **다른 버팀목대출**을 이용 중인 피해자도 **피해자 전용 대출***로 **전환** 지원(7.10)

* (일반) 2.1~2.9%, (청년) 1.8~2.7%, (신혼부부) 1.5~2.7% 등 ⇨ (피해자 전용) 1.2~2.7%

- 피해자가 **피해주택 낙찰 시 디딤돌 대출**로 경락자금 마련 지원, **생애최초 혜택***은 **장래 다른 주택구입 시 활용**하도록 허용(7.10)

* ①금리 0.2%p 인하, ②LTV 10% 우대(70→80%), ③대출한도 확대(2.5→3억원)

○ (**절차 효율화**) 피해자가 **온라인을 통해 피해자 신청**을 하고 **결정통지**를 받을 수 있도록 '**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**' **구축**(4.25)

*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방문 접수 필요

○ (**피해예방**) 임대인-임차인간 **정보 비대칭**을 **해소**하고 **중개사의 책임을 강화**하는 등 전세사기로부터 **임차인**을 든든하게 **보호**

- **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** 대폭 **확대***, **공인중개사**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**확인·설명 의무화**(7.10), 전세사기 **예방**을 위한 **맞춤형 교육****(10.19~, 3周)

*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'24.1분기 29명 → '24.末 1,000명 이상
** 주택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용 다큐멘터리(EBS) 제작·배포 등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특별법 개정안 시행(11.11)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**추진상황 지속 점검** 및 **보완방안 검토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전세사기 피해자 처리기간 단축, 피해예방 활동, 피해지원 실적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정부안 중심의 법률 개정안 발의 과제는 야당, 피해자위원회 등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, 피해자단체 면담, 전문가 토론회, 관계기관 회의 등 수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지원방안 강화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경·공매, 주거, 금융, 세제, 법률 등 총 20,798건/8,795억원의 전방위적 지원<br>• 정부안 중심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 지원 근거 마련, 위반건축물 등 사각지대 보완 등 피해지원 강화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76 | |

| Ⅲ-3-① |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**(공공주택건설 품질강화)** 공공주택 개발사업 **전 과정**(설계·시공·감리)에 대한 LH의 **업체 선정 권한**을 **조달청**으로 **이관**('24.4), **감리업체 선정·감독기능**을 **국토안전원**으로 이관 추진(LH법 발의, '24.7)

- LH 중심의 **독점적 공공주택 공급**구조를 **경쟁 구도로 재편**하여 **품질경쟁 유도**를 위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**민간건설사**를 **공공주택사업자**로 **지정**할 수 있도록 **「공공주택법」 개정** 추진

- LH-퇴직자 간 **유착**의 **근본적 해소**를 위해 **3급**(퇴직시) **소속업체**까지 LH 입찰참여 제한 등 **불이익 부과**, **구조설계 2단계 검증** 및 모든 LH시공 아파트 **안전점검** 등 법령보다 **강화된 기준**으로 **안전·품질** 확보

○ **(공시제도 개선)** 공시가격의 **인위적 상승 방지**를 위해 현실화 계획 폐지를 전제로 하는 '**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**' 발표(9.12),

- '**현실화 계획 폐지**' **법 개정** 완료 전이나 **합리화 방안**을 '25년 공시에 **적용**하기 위해 **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발표**(11.19, 국무회의)

○ **(소비자 보호 강화)** 지능화·조직화되고 있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여 **거래 전(全)단계**에서 **소비자보호 강화**를 위한 **개선 완료**

- 인공지능(AI), 사회연결망분석(SNA)을 활용한 전세사기, 기획부동산 **의심거래 선별기법 고도화** 및 유형·지역별 **기획조사 다각화**하여 **전세사기 의심거래 4,137건** 및 **관련자 1,414명 수사 의뢰**(~4차)

- **외국인 투기 근절**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(9,220건 중 530건) 및 토지(3,649건 중 154건)·비주택(889건 중 36건) **이상거래 기획조사** 등 실시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중개사**의 **확인·설명 의무**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(5건, '25.7~11)되었으나 **개업 공인중개사 수*는 감소** 추세로 **합리적 개선방안** 마련 필요

* (개업공인중개사 수) ('22.12) 11.3만명 → ('23.12) 11.1만명 → ('24.12) 10.8만명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이권개입 해소 등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 확보, 공시제도 개선,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LH 혁신은 기본권 제한 소지 등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매우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공시제도 개선 등도 국민들의 기본권 및 재정건전성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합리적 대안 도출이 매우 중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2.6% | •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지연<br>•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마련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계부처, 전문가 의견수렴, 국민 인식조사, 공청회 등 실시<br>•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이상거래 1,752건 조사 착수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6.7% | • 부동산거래신고법 발의 미달성(개정안 의원실 제출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공시제도 개선으로 국민 재산세 부담 61% 완화<br>•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증가('23, 18.1만건→'24.1~11월, 20.2만건)로 투명한 중개 서비스 제공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17 | |

| Ⅲ-3-② |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**(부동산 활성화)** 매수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한 **토지리턴제 확대***하고, **공동주택 토지비**와 **공공주택 건설비**를 상계하는 **新 패키지형 공모** 추진(평택고덕 시범사업 7월 공모, 12월 우선협상자 선정)

* 1년 연장(23.8~12→'24.12) 및 대상토지 확대하여 11필지 2,540억원 매각

- PF 사업의 **자기자본비율 개선**을 위한 토지 소유주 **현물출자 허용, 규제완화·인센티브** 지원방안을 발표('24.11)하고, 정부차원의 **PF 관리 기반 마련**을 **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」 제정안** 발의('24.9)

- PF 부실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**10년 만에 PF 조정위 재개**('23), **상설화**를 **결정**(비경, '24.3)하고 **66개 사업**(약 19조원) **조정안 권고**

- **비주택 건축물 분양통계** 관련 **상시 관리방안**을 마련(2.13)하여 비주택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

○ **(리츠 활성화)** 고금리 등 침체된 리츠 **시장 규모 확대 및 투자 대상 다양화** 등을 위한 **「리츠 활성화 방안」 발표**(6.17), **개발사업 단계별 특성**을 **고려**하여 **프로젝트 리츠 도입**(부투법 발의, 8.19)

-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**헬스케어 등 리츠 투자대상 확대**(시행령 개정, 12월), 부동산 이익이 **지역 주민에게 제공**되도록 **지역 주민** 중심의 '**지역상생리츠***' 도입 등 추진(부투법 발의, 8.28)

○ **(국가 지원 확대)** 시장의 통합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가 통합지수와 지가변동률 관리지역 **통합지수**를 **새롭게 생산·공표**(5월)하고, 91종('24년 누적, **260종**)의 **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성과** 창출

- 부동산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**업계 간담회**('24.5, 장관 주재), **우수 스타트업 간담회**('24.6,8, 2회), **전문가 자문**('24.4,5,6,7,9,11, 9회) 등을 통해 인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비스법 개정 추진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올해 운영을 본격 개시하는 **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의 운영근거 마련** 등 부동산 신산업육성 시책 고도화를 위한 **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,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, 정보공개 확대 등 부동산산업 지원 강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공공과 민간사업자, 대주단 등 이해 관계자간 의견 조정·조율이 매우 중요하며, 프롭테크업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관리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2% | •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 추진 지연<br>•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편안 발의 미달성(개정안 의원실 제출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, 업계 간담회 50여회 이상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<br>•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CR 리츠 재가동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7% | •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발의 미달성(개정안 의원실 제출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토지리턴제 적용 확대로 공공택지 11필지 2,540억원 매각을 통해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여건 조성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03 | |

| Ⅳ-1-① |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**수도권 내 시급한 교통현안 해결로 출퇴근 불편 해소**

- **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방안**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의 교통 **개선대책**을 마련하여 **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**

- 운정역(GTX-A) 환승센터 **연계교통체계 마련, 광역버스 증회** 등 **북부권**(고양, 파주, 의정부, 양주) **광역교통 개선 방안** 마련

○ **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견인**

- (**광역·도시철도**) 남양주 별내·갈매·진건·지금지구 등 **경기 동북부** 지역의 **정주여건 조성**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**별내선 개통**

- (**광역·혼잡도로·BRT**) **동김해-식만JCT**(12월 준공) 등 9개(58.5km) 광역도로 사업과 공단고가교-서인천IC 등 17개(72.3km) 혼잡도로 **추진**

- (**환승센터**) **GTX-A 개통**에 대비하여 **운정역**을 연내 준공('24.12), **동탄**('24.6 착공)·**삼성역**('21.6 착공) 공사 본격화 등 사업 추진

○ **신규 서비스·인프라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**

- (**트램 가이드라인**) **무분별한 트램 사업** 추진을 **방지**하고 도시철도 **망계획 수립** 前 차량시스템 선정, 노선검토 등 필요사항 **제도화**

- (**광역콜버스 시범사업**) 신도시 등 **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**를 위해 진행 중('23.8~)인 '**광역콜버스**' 사업 확대를 위한 **제도화 추진**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**광역 수요응답형 운송사업**(M-DRT) **활성화**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

- **광역권 이동 편의**를 위해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내 시·도 간을 이동하는 '**광역DRT**'에 대한 **법적 근거** 마련

- 나아가,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법상 **광역버스운송사업**의 종류에 **광역DRT**를 **포함하는** 내용으로 법률개정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광역 환승센터 착준공, BRT 이용 확대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광역·도시철도는 지자체, 운영기관 간 재원분담, 법적 책임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이견 해소를 위해 TF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공동용역 추진<br>• 별내선 적기 개통을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 등 사전점검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도봉산-옥정, 옥정-포천, 별내선, 고양은평선, 강동-하남-남양주선, 송파하남선의 6개 광역철도 건설로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61 | |

| Ⅳ-1-② |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광역교통망 신속구축**) **집중투자사업** 및 **수도권 맞춤형 교통정책 발표**를 통해 신도시 입주민의 **교통불편 해소, 광역교통시설 조기공급('24.下)**

* (집중투자사업) TF구성(대광위, 지자체 LH 등)으로 총 **32개 사업, 7.4조원 투입**(2월~9월)
** (수도권 맞춤형 종합대책) **남부권(5.3), 북부권(6.4), 동부권(7.18), 서부권(9.11)**

○ (**광역버스 편의제고**) 광역버스 **12개 노선신설**('24.6), 광역버스 노선(32개) 대광위 **준공영제 이관**('24.12), **좌석예약제*** 등 서비스 강화 등

*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고 정류소 대기 없이 탑승이 가능토록 **65개 노선 150회까지 확대**('24.4. ~ 6.)

○ (**대중교통비 지원**) K-패스 출시('24.5.1) 후 3개월 만에 **이용자 수 200만명**을 돌파하는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대표 **교통분야 민생정책***으로 자리매김

* 265만명('24.12)에게 월평균 1.8만원 환급 지원(26.6% 절감)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 입증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지방권 교통정책**) 지방 초광역권 계획 연계 및 교통혼잡 해소, 산업벨트 육성을 위한 **지방 대도시권 맞춤형 광역교통 종합대책* 필요**

* 광역교통개선대책 + 광역교통시행계획 +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 + 국가철도망 계획 등 종합

○ (**광역버스**) 국가사무로의 이관이 완료(192개 노선, ~'25)됨에 따라, 교통여건 변화에 **탄력적 대응**하기 위한 **노선 운영기준*** 보완 필요

* (효율성) 적자/비용 비율, 탑승률, 차량당 운행횟수, (공공성) 대체수단 보유, 접근성 등

○ (**대중교통비 지원**)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**인증 수단 확대, 시인성 개선** 등 사용자 맞춤형 **추진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K-패스 , 준공영제 버스 운행,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광역교통대책 특성상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,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9.9% | • 연차별 투자계획 등 광역교통법 하위법령 등 개정 일부 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해 집중투자사업 유형별 5개 TF 구성(약 30회 운영), 지자체 간담회, 세미나 등 개최<br>• 기관 간 갈등사업 16개 적극 조정·중재 완료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9.2% | •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일부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(5차례)을 통해 별내~잠실 16분 단축(별내선 신설), 대곡역~의정부역 40분 단축(고양~양주~의정부 개통) 등 교통 편의 대폭 개선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77 | |

| Ⅳ-2-① | 누구나, 어디서나,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교통약자**) **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예약시스템** 구축('24.12),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대상 확대[시외→ 전세버스]('24.1), 교통약자법 시행)

-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량(좌석형 휠체어→다인승·침대형휠체어) 확대('24.12),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**정류장 표준모델** 개발('24.12) 등

○ (**벽지노선 확대**) 교통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**벽지노선 및 대체교통수단**(공공형 버스·택시) **지원 확대**

○ (**필수노선 관리 강화**) 수익성은 부족하나 지속유지가 필요한 **시외·고속버스** 노선 선정 및 지원 **가이드라인 마련**('24.12)

○ (**교통안전**) 취약분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**관계부처**(국토부·행안부·경찰청 등) **합동으로** 「**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**」 수립('24.4)

- (**보행환경 개선**) 자전거·PM 통행이 많은 **대학교 도로**를 **교통안전 관리 대상**에 포함하여 도로 외 구간의 안전관리 강화(교통안전법, '24.8)

- (**사업용 차량**) **트렉터·화물차(25톤 이상)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** (교통안전법, '24.10)로 화물기사의 안전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(**이륜차**) 이륜차의 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**공익제보단**(5,500명)을 운영하여 **단속 사각지대 최소화**

* 신고 191,649건(~'24.9) →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('24.1~10월)는 전년동기대비 8.9% 감소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 등 노력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**자가용 이용자 증가** 등으로 **시외·고속버스** 업계 **어려움 여전**

○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 중이나, 고령화 등 **사고 증가요인**에 의해 **사망자 감소 추세는 둔화**

- 올해 수립한 안전대책 중 사고 감소효과를 보인 정책은 확대 시행하면서 **취약분야**에 대한 **맞춤형 대책**은 더욱 **보강 필요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, 저상버스 확대, 필수 시외·고속버스 노선 선정 등 대표 과제로 구성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중앙-지자체-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며, 영세한 여객화물 운수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교통약자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, 관련기관, 국회 등과 다수 간담회 개최<br>• 교통 취약지역 시외·고속버스 노선 지원방안 마련 前 단기 대책으로 벽지노선 업무처리지침 개정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벽지노선, 공공형 버스·택시 지원 예산 확대로 교통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제고<br>* 벽지노선 예산: 287억원('20) → 375억원('24)<br>노선 수: 3,466개('20) → 3,893개('24)<br>100원 택시등 예산: 246억원('20) → 360억원('24)<br>이용자수: 245만명('20) → 374만명('23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7 | |

| Ⅳ-2-② |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| B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DRT 광역화**) 광역버스 수송력 보완을 위해 수요에 탄력 대응이 가능한 **DRT를 둘 이상의 시·도까지 운행**할 수 있도록 **근거 마련**('24.7)

○ (**전세버스 활용 확대**) **출퇴근 시간대 수도권**(서울·인천·경기) 2개 이상 시·도를 운행하는 **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**(여객법 시행령 개정, '24.12)

○ (**고속버스 편의제고**) **고속버스**의 **중간 정차지**를 **확대**(최대 각 1개소 → 각 2개소) 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(여객법 시행규칙 개정, '24.12)

○ (**택시서비스 개선**) 인구급증 등 지역 여건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**제5차 택시 총량제 개선방안** 마련('24.11)

- 수도권에 활성화된 **대형승합택시**를 **지방**까지 확산하기 위해 **면허권자**를 現**시장** → 改**군수**로 **확대**하는 「여객법 시행규칙」 개정('24.12)

○ (**연계교통**) **GTX-A 개통**에 **대비**하여 지자체, 철도공단, 전문가 등과 **TF**를 **구성**하여 **현장점검** 등을 통한 **연계교통대책 선제적 마련**('24.3·12월)

- **버스**노선 조정, **DRT** 증차, **주차장 및 환승구역 설치** 등을 **추진**하고,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**대국민 홍보** 실시

○ (**탄소중립**) 기후변화, 에너지 위기 등 **교통물류 여건 변화**에 대한 **대응**을 위한 **'24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시행계획 수립**('24.4)

○ (**수소교통 복합기지**) 주요 **교통거점**에 대용량 **수소충전소** 및 **부대시설**을 조성하는 **수소교통 복합기지 2개소 준공**('24.6·12), 5개소 건설 중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**대도시권 출퇴근 불편** 및 **지방 교통 불편** 여전 → 지역별 **맞춤형 교통정책**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DRT 활용 확대, 택시 총량제 개정, 수소교통 복합기지 확충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교통산업은 과거부터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이 매우 강한 분야로, 대중교통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업계와의 유연한 소통·조율 뿐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조 등도 필수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6.6% | •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미달성(입법예고 이후 전기차 화재에 따라 보완 중)<br>• 택시 총량제 기준 관련 법령 개정 미달성(입법예고 중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 현안 논의를 위해 공공·연구기관, 학계가 참여하는 교통 대토론회 개최<br>•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에 앞서 노조·여야간 이견이 발생했으나 설득을 거쳐 2년 유예 결정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4.2% | • 택시 총량제 기준 관련 법령 개정 미달성(입법예고 중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세종시 버스 대비 통행시간 37.7% 감소(셔클-DRT), 청주시 버스 대기시간 최대 90% 감소(콜버스)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8 | |

| Ⅳ-2-③ |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소비자 보호**) **신차 하자 추정기간 연장**(6개월→1년), 중고차 **매매 공제조합** 설립('24.2), 침수차 **불법유통 처벌 강화** 등 소비자 보호 강화

○ (**안전관리 강화**) 사고기록장치(EDR) 장착 의무화('24.2[법개정]), 페달 블랙박스 장착 활성화(보험료 할인, 리콜 과징금 감경) 등 자동차 운행안전 강화

○ (**전기차 화재대책**) 관계부처 합동 대책*('24.9)을 통해 전기차 **배터리 인증제**('24.10 시범사업) 및 **全주기 배터리 이력관리 도입** 등 제도개선

* (주요내용) ①배터리 인증제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, ②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, ③14개 주요 제작사 무상안전점검 및 정보공개, ④배터리 실명제를 통한 주요정보 공개 의무화

○ (**규제 개선**) 번호판 **봉인제**('62년 도입) **및 임시운행허가증** 부착 의무 등 **규제 폐지**('25.2[시행]), 비사업용 승용차 검사주기 완화* 등

* (**최초 검사유효기간**) 4년→5년 / (**검사기간**)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→90일 전(+59일)

○ (**위법·편법 근절**) 과잉진료 등 **국토부·복지부 합동실태** 조사('24.2), 부정수급 단속('24.11), 음주측정 **불응자 사고부담금* 적용**('24.2[시행])

*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,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침수차**) 「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('22.8)」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개정('24.8) 등 완료, **주기적인 실태점검**(반기별) 등 관리 강화 필요

○ (**자동차보험**) **부정수급 근절**을 위해 의료기관-보험사 진료기록 등 정보공유 강화, 경상환자 장기치료 입증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.중고차 조합설립, 민간검사소의 중·대형 화물차 집중점검,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개선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중고차, 완성차, 성능점검, 검사정비, 의료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,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도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4% | • 이륜차 후면번호판 개선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, 제작사 간담회,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<br>• 대기업 중고차 시장진출에 따라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인가·사업계획 승인 등 추진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6.6% | • 이륜차 번호판 개선 미달성(입법예고 완료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신속한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 및 사회적 불안감 완화<br>•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한방진료비 합리화를 통해 연 550억원의 진료비 절감으로 국민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7 | |

| V-1-① |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| F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승객 안전**) **범죄검거율**은 '24년 **92.4%**로 전년('23년 92.1%) 대비 **증가**

- **김포골드라인**의 **최대혼잡도**는 **증차 전**('23년 215%) 대비 **28%p*** **감소**

* 증차 후 '24.10월 1~3주간 혼잡도가 187%('24년)로 증차 전 215%('23년) 대비 감소

○ (**사고 재발방지 대책**) 서울역 열차 **추돌사고 재발방지 방안**('24.6), **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**('24.7), 고속철도 **탈선사고 재발방지 대책**('24.12) 수립

○ (**철도종사자 R&D**) 철도종사자 **인적요인 특성** 데이터 수집·관리시스템, **인적오류 평가시스템**, 가상훈련 및 운행안전 **지원시스템 설계**('24)

* 철도 종사자의 인적오류 분석·평가 및 예방 기술 개발 R&D('24년 예산 27억원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**무선입환시스템 개조승인*** **절차**로 인해 **당초 목표 대비 도입 실적**이 **부진**하므로, 무선제어 취급자 양성 등 **조속한 도입 준비** 필요

* 차량내 원격조정 제어장치 및 SW 설계·장착을 위한 차량개조 형식승인 추진('24.4~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무선입환시스템 원격조정 취급이 가능한 **인력 양성**('25.상반기)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철도종사자 사상자 수, 철도사고 사상자 수, 철도 5대 범죄 검거율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 모두 대부분 규제 사항으로 철도운영기관, 노조 등 이해관계자 조정, 설득 작업이 필수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김포골드라인 및 서울지하철 증차 요구 강화에 따라 한시적 차량 증편 예산 지원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0% | • 무선제어입환 도입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. • 고강도 대책으로 전년 대비(1~10월 기준) 철도사고 33.9% 감소('23년 59건 → '24년 39건), 사상자수 3.4% 감소('23년 29명 → '24년 28명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57 | |

| V-1-② |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| E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사고·장애 감소**) ’24년 대비 **철도사고 34%, 사상자수 14% 감소**

* 철도사고 : (’23) 68건 → (’24) 45건(33.8%↓) / 사상자수 : (’23) 35명 → (’24) 30명(14.3%↓)

○ (**혁신방안 수립**) **철도안전 강화대책**(’23.1) **성과, 국제컨설팅** 결과를 **종합**적으로 **분석**하여 **「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*」** 수립(’24.7)

* 관제 중앙집중화, 차량 점검·정비 방식 개선, 선로등급제 방안 마련 등 추진

○ (**유지보수 첨단화**) **인력** 중심의 유지보수 업무를 **장비**중심으로 **전환**하기 위해 통합검측차, 궤도안정기 등 **첨단장비 도입**(’24년, 20대 발주)

○ (**노후화 개선**) **화물역 노후시설개량**(7개역), **궤도구조 개량***, **노후 역사 개량**(28개) 및 25년 이상 경과 **노후차량 교체****(’24년, 581억원) **지원**

* 교체시기가 근접한 서울~금천구청, 대전연결선 레일개량(15km) 및 분기기(40틀) 개선

** (총 2,086대) ’21년(572대) → ’22년(260대) → ’23년(272대) → ’24년(462대) → ’25년(520대)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**관제 중앙집중화** 달성을 위한 목표,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마련됐으므로(’24.12), 이에 대한 **구체적 추진 방안**을 **도출**할 필요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‘**상시로컬역 중앙관제 수용을 위한 기술용역**(’25.1~’25.11)’ 결과를 토대로 상시로컬역 운영 체계, 법률·제도 관련 **세부추진 방안 도출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철도사고·운행장애 건수, 철도안전 혁신방안 수립, 노후철도 개선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B | • 철도운영기관, 종사자 및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나, 이해관계 대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% | • 관제집중화 로드맵 수립 일부 달성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지하철 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, 운영사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 강화 추진<br>•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대해, 대체기관사 확보 및 대국민 안내 등 적기 대응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「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」 수립('24.7), 노후차량 운행안전 확보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 추진으로 철도사고 감소('23, 68건 → '24.10, 39건)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32 | |

| V-1-③ |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| G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**) 안전데이터 수집 확대(10→12종), 민관연 데이터 협력·연구 추진, 한국형 위해요인 분류체계 마련

○ (**차세대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**) 민·군 공역 특성을 고려한 국가공역체계 개선을 통해 신공항 개항 대비 공항수용량 증대(기존 75대/h→ 78대/h), 탄소절감형 탄력적 항로 정식 운영 및 공역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플랜(안) 마련

○ (**항행위성시스템 서비스 확대**) KASS 2호 위성 식별코드 획득, 발사성공('24.11월, 美) 및 KASS 준정밀접근(APV-I) 비행절차 수립

### 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 지속적인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·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,

- '24.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으로 국적항공사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과 11년 연속 무사망 사고('14~'24) 달성(성과지표)에 실패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촘촘한 예방중심의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항공안전혁신 대책마련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S | •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, 미래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항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항공사, 공항공사, 관제기관, 기상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8% | • KASS 데이터 인터넷 제공 플랫폼 설계(안) 마련 지연(설계안 보고 완료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간담회, 국제세미나, 활주로 안전위원회 등 개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80% | • 국적항공사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 미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인천공항 활주로 4본 운영에 대비하여 수도권 공역 조정을 통한 관제 수용량 증대(기존 75대→78대/h)<br>• 다만,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증대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85 | |

| Ⅴ-2-① |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건설사고 감축**) ’24년 **건설사고 사망자**(CSI 기준)는 **‘23년 대비 16.4% 감소**한 2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**목표**(219명) **초과달성**

* ’20년. 251명 → ’21년. 271 → ’22년. 238 → ’23년. 244 → ’24년. 204(잠정)

○ (**건설현장 점검**) **취약시기**(해빙기·우기·동절기) **점검, 시평 100위** 內 건설사의 **사망사고 관련 현장 특별점검** 등 **2.2만회**의 점검 실시

○ (**중소규모 현장 안전 강화**) **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확대**(’23년 87개소 →’24년 159개소) 및 **찾아가는 안전컨설팅·코칭** 실시(1,300회)

○ (**지반침하 대응·예방**) 「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TF」를 통해 **굴착공사장 특별점검**(94개소), **「제2차 국가 지하안전 기본계획」 수립** 등 추진

○ (**기후변화 선제대응**) 「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」 구성·운영, 취약 **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*** 발표(10.23, 보도자료 배포)

* 고위험 교량 세굴조사 의무 실시, 안전등급 산정기준 재정비 등

○ (**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**) **복지부 협업**을 통해 **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*** 안전점검 27,718개소 실시(전년 14,160개소 대비 95% 증가)

* (대상) 시설물안전법상 1~3종 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(노인/어린이 시설), 전통시장 등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추락사고 집중관리 필요**) **사망자 수**는 **감축**되었으나, **추락사고**는 여전히 **매년 절반 이상**을 차지, **집중관리***를 통한 감축 필요

*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’24.11월부터 「추락사고 예방 TF」를 운영(격주 1회) 중으로, 대책 수립(1분기) 및 이행점검(2분기)을 통해 획기적 감축 노력 중

○ (**유지관리 BIM 발간**) **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유지관리자 편**이 마련되어(’24.12), 최종 의견수렴 등을 거쳐 ‘25년 상반기 발행 예정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, 지하안전강화,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규제 강화,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(시공, 설계, 감리, 근로자 등)간 이견 조정 및 선제적 갈등 관리가 중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6.8% | . • 「영상기록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」 개정 미달성(방침 완료)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건설현장 방문, 전문가 자문회의, TF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 노력<br>•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TF 운영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'24.11월 말 기준 건설사고 사망자는 18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7.4% 감소<br>• '24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27,718건('24.11월 기준)으로, 전년도(14,160건) 대비 195%, 목표치(2만건) 대비 138% 달성 등 시설물 안전확보 기여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98 | |

| Ⅴ-2-② |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| C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생활숙박시설**) 생숙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,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 등 **'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' 발표**(10월)

-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**생숙 11.2만실**에 대한 **합법 사용 지원**방안 마련을 통해 **생숙發 PF 리스크 해소**

○ (**무량판 구조**) 무량판 구조 설계·시공·감리 시 안전관리 강화*를 위해 **특수구조 건축물 유형**에 **추가**하도록 **'건축법 시행령' 개정**(12월)

* (인허가) 구조심의 / (설계·감리)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/ (시공) 사진·동영상 기록

○ (**위반건축물**)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**전국 인파밀집지역**에 대한 **위반건축물 실태조사** 및 **조치 완료**(1월~)

* 543건 적발 (시정명령 233건, 이행강제금 부과 207건, 시정완료 103건)

- 아울러, 선의의 피해자* 구제를 위해 **이행강제금 최대 감경률**을 **상향**하도록 **'건축법 시행령' 개정**(6월) 등

* 소유자 변경, 사용승인 당시 위반사항을 발견 못한 경우 등

○ (**규제개선**) 구조부 변경이 없고 **구조내력 변경**이 **경미**한 증축·대수선 등은 **구조안전 확인 절차**를 **간소화**하도록 **'건축법 시행령'** 등 **개정**(12월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(**외부지적**) 국회에서 지적한 **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강화**를 위한 근본적 **개선방안, 방치건축물 정비촉진 활성화** 방안 마련 필요

○ (**규제합리화**) 상가 공실을 **다양한 용도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**탄력적 용도전환** 방안 검토, **용적률 거래 활성화**를 위한 **결합건축 적용완화** 등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, 화재안전 성능보강,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 등 대표성 있는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업역 분쟁 등 이해관계자 의견대립이 심하여 세심한 설득·의견조정이 필요하며,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및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개선 등 과제는 민원 관리, 관계부처 협업 등 많은 노력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유도를 위해 업계, 지자체와 간담회 다수 개최 및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를 위해 전문가, 관계기관 회의 다수 실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96.5% | •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를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미달성(입법예고 중)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11.2만실에 대한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한 PF 리스크 해소 |
| 3-3. 정책만족도 | 10.00 | |

| Ⅴ-2-③ | 도로 환경·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| D |
|---|---|---|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○ (**교통정체 개선**) ‘26년까지 상습정체 길이 30% 감축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편의 제고

○ (**과감한 규제개선**) 접도구역 개선,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포장파임 배상체계 개선방안 등 국민 불편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만족도 제고

○ (**개방형휴게소 확대**) 휴게소 접근 편의 향상 및 지역 특산물 판매점, 테마파크 등 특색있는 지역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

○ (**회전교차로 홍보**) 진·출입 우선순위 등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하여 경찰청,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홍보를 실시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

○ (**첨단기술 활용**) 교량·비탈면에 IoT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낙하물 AI 자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 강화

○ (**구조물 재정비**) 오송 지하차도 침수(’23.7) 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를 위한 지침 강화 및 소관 진입차단시설 설치 완료 등 도로안전도 향상

○ (**동절기 제설대책**) 도로 순찰 강화, 결빙취약구간 지정·관리, 자동염수분사시설 등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·시설물 보강

○ (**협의체 운영**) 본부-지방청-전문가간 안전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소규모 안전 대책 수립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도로 이용자의 높아지는 요구 수준에 따라 도로정책 수립 및 평가 활용에 필요한 도로관리 예산 확보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, 간선도로 착공·개통, 지하고속도로 추진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A | • 도로포장 파임 배상체계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커 정교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며, 휴게소 서비스 개선은 운영업체· 도로공사 등과의 이해관계 조율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97.6% | 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지연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S | • 회전교차로 통행문화 정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, 하이패스IC 설치 관련 팸투어 등 진행<br>• 해외 교량 화물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대응체계 및 관련 기준 점검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A | • 친환경차 장거리 운전 시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447기 확충으로 고속도로 숏 휴게소 내 구축, 수소차 12기 확충 완료 |
| 3-3. 정책만족도 | 9.49 | |

| V-2-④ | 친환경·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| E |
|---|---|---|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(**친환경 공항**) **노후 지상조업차량 폐차 시 지원금이 지급**될 수 있도록 **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**('24.5.13. 개정, '25.1.1. 시행)

○ (**소음대책 주민체감도 제고**) 기존의 **주민지원사업 한계**를 **보완**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**직접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**

○ (**안전관리 법제화**)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**조업사 점검·조사 근거 시행**('24.8~) 후 '23년 대비 **사고 발생빈도 감소**

○ (**첨단장비 도입**) 인천공항의 휴대수하물 검색장비를 소형·액체류 폭발물 탐지기능이 강화된 **CT X-ray장비***로 **전면 교체 중**(~'25.12)

* '24년 30대, '25년까지 45대 등 총 75대를 신규 도입하여 총 84대 설치 예정

○ (**스마트패스**) 인천공항 全구역(출국심사 제외)에서 여권·항공권 없이 생체정보(얼굴)를 활용한 **"스마트패스" 확대** 구축 추진(~'25.12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국내외 및 상대국 여건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일정의 지연·변경·추가 등에 **적시 대응**할 수 있는 **기반 마련** 필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원활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**'26년 예산 확보**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| 평가지표 | 평가결과 | 평정근거 및 제언 |
|---|---|---|
| 1-1. 계획 수립의 적절성 | A | • 지상안전사고 감소, 공항시설 확충,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개선 등 대표적 과제 포함 |
| 1-2. 성과지표의 난이도 | S | • 항공업계 규제와 연결되어 업계 반발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|
| 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 | 100% | •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 |
| 2-2. 행정여건.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| A | • 내실있는 공항 소음대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, 국회 · 지자체 · 항공사 등과 간담회 실시 |
| 3-1. 성과지표 달성도 | 100% | •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달성 |
| 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 | S | •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분 확인으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패스 이용자 증가('24.11 기준, 22.9만명 이용, '23년 대비 4.2% 증가) |
| 3-3. 정책만족도 | 8.57 | |

## 4.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

| 관리과제 번호 |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| 조치계획(조치시한) |
|---|---|---|
| Ⅰ-1-④ | ○ 성공적인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협력과 新기술 융합 등 각 분야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, 융합포럼 지속 운영 필요 | ○ '25년 수소융합포럼 개최('25.6월) |
| 1-2-② | ○ 적정한 우선구매 목표치 설정 위한 별도 연구 및 검토 | ○ 관련 정책연구용역 착수('25.7월) |
| | ○ 설정목표 달성토록 지속 관리 | ○ 간담회 등을 통한 목표치 달성 독려 ('25.8월) |
| Ⅰ-2-③ | ○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| ○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('25.上) |
| Ⅰ-2-④ | ○ 민군공항 영향평가 통합 시행 | ○ 민군공항 사업절차에 맞춰 통합 시행(상시) |
| Ⅰ-3-① | ○ '25년초 제주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착수 | ○ 제주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착수('25.3월) |
| Ⅱ-1-① | ○ 인프라외교, 지역별 수주전략을 통해 해외수주 실적 제고 필요 | ○ 인프라 외교 및 지역별 맞춤 수주전략을 추진하여 업계 지속 지원('25.12) |
| Ⅱ-1-③ | ○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| ○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고 ('25.3월) |
| Ⅱ-1-⑤ | ○ 국제 영향력 확대 | ○ 다양한 ICAO 회의 대표단 파견(계속) |
| | | ○ ICAO 총회 참석, 이사국 연임 추진 ('24.9~10월) |
| Ⅱ-2-② | ○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정착 | ○ 기준 개정사항 교육 및 홍보('25.3.) |
| Ⅱ-2-⑤ | ○ 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(관세법 개정) | ○ 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관세법 개정 (~'25년 상반기) |
| Ⅱ-2-⑥ | ○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입법 발의,「지적확정측량 규정」 및 「GNSS측량규정」 개정·공포 | ○ 의원 입법 발의 및 규정 개정·공포 ('25.6월) |
| Ⅲ-2-③ | ○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임법 시행령 개정 | ○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('25.1월 완료) |
| Ⅴ-1-① | ○ 무선입환시스템 도입 | ○ 무선입환 원격조정 취급 인력양성('25.6월) |
| Ⅴ-1-② | ○ 관제 중앙집중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| ○ '24년 수립한 중앙관제 수용방안 세부이행계획 마련('25.12월) |
| Ⅴ-1-③ | ○ 항공안전혁신 대책 마련 | ○ 항공사 종합안전점검 실시('24.1월)_완료 |
| | | ○ 항공안전혁신 대책(안) 마련('24.4월) |
| Ⅴ-2-④ | ○ 국가항공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 | ○ '26년 예산 확보('25.下) |

# [붙임] 2024 전략목표
# 성과분석 보고서

# 1.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

◇ **국토교통부**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, 국토의 보전·이용 및 개발, 도시·도로 및 주택의 건설, 해안·하천 및 간척, 육운·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 (정부조직법 제43조)

## □ 핵심기능

| | |
|---|---|
| **국토·도시** | ▪ 국토종합계획, 지역개발정책, 하천관리계획 등 수립·추진<br>▪ 도시재생,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, 개발제한구역·도시공원 등 추진<br>▪ 토지이용규제 합리화,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|
| **주택·토지** | ▪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<br>▪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원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<br>▪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,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 |
| **건설** | ▪ 건설산업 발전·육성 방안 마련 및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추진<br>▪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글로벌 인프라협력외교 총괄<br>▪ 건설현장 및 기반시설물 안전대책 수립·추진 |
| **교통·물류** | ▪ 종합교통체계, 광역교통체계, 통합연계형 물류체계 구축<br>▪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<br>▪ 자동차 등록·안전관리·운행 등 자동차 정책 수립·추진 |
| **항공** | ▪ 항공 관련 제도, 공항 개발, 항공물류 및 항공보안 등 총괄<br>▪ 항공협정 체결 및 운수권 배분, 항공자유화<br>▪ 항공사고예방 정책, 공항 소음대책·환경관리 총괄 |
| **도로** | ▪ 빠르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국토경쟁력 강화<br>▪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<br>▪ ITS 등 첨단운영체계를 통한 도로교통서비스 제공 |
| **철도** | ▪ 철도산업발전 지원 및 국가철도망 구축<br>▪ 일반·고속·광역·도시철도 제도운용 및 확충, 유지보수<br>▪ 철도사업제도 운용 및 철도물류체계 개선, 철도산업기술 육성 |

# 국토교통부 조직도

| 기 구 | 기준정원 |
|---|---|
| ㅇ 본부 : 2차관 5실 1대변인 4국 17관 90과 9팀<br>ㅇ 소속 : 1차 15개, 2차 41개, 3차 31개<br>- 책임운영기관 2개(국토지리정보원, 항공교통본부) | ㅇ 총 4,104명<br>- 본부 : 1,053명(한시정원 40명 포함)<br>- 소속 : 3,051명(책임운영기관 460명 포함) |

## □ 본 부




※ 한시조직(3개) :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(~'25.3.31.), 도시정비기획과(~'27.5.27.), 광역급행철도기획과(~'27.11.25.)

※ 자율기구(2개) : 도시정비지원과('24.5.28.~'25.5.27.),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('24.11.26.~'25.11.25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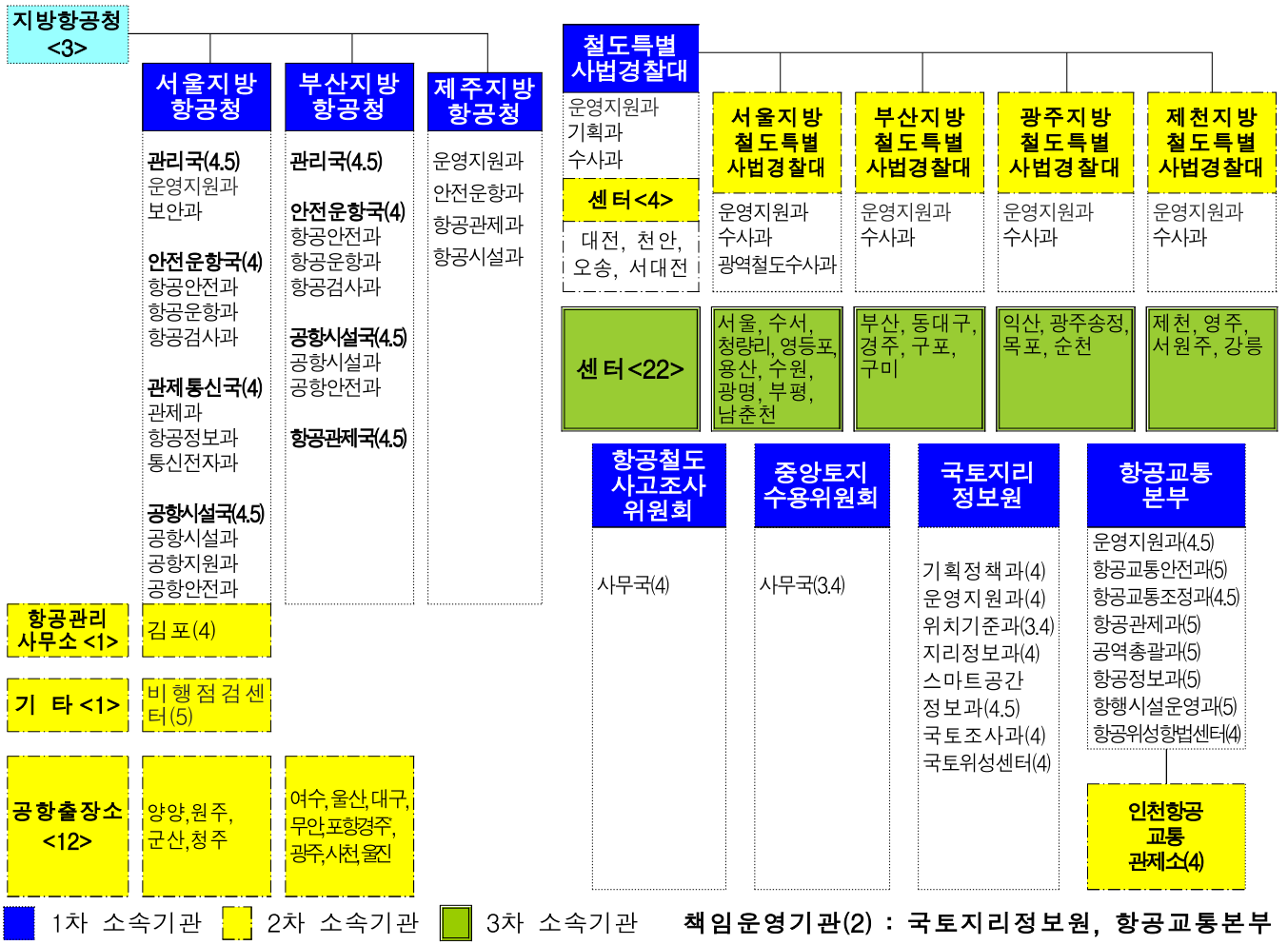
※ 총액인건비제팀(본부9개) : 뉴미디어홍보팀(~'25.9.30.), 건설현장준법감시팀(~'25.7.21.), 디지털도로팀(~'25.7.21.), 공항건설팀(~'25.6.30.), 생활물류정책팀(~'26.12.31.), 주택임대차기획팀(~'25.12.31.), 항공자격국제협력팀(~'25.12.31.), 청년정책총괄팀(~'26.6.30.),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(~'26.6.30.)

- 지방청(5개) :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국토청 교통안전팀(~'26.12.31.)

※ 별도조직(7개) : 공공주택본부(~'26.12),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(~'25.12.), 혁신도시발전추진단(~'25.6.),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(~'26.6.),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(~'25.6.), 전세사기피해지원단(~'25.7.), TK신공항건설추진단(~'26.12.)

## □ 소속기관 (87개 : 1차 15개, 2차 41개, 3차 31개)



## 2. 전략적 목표체계

**임 무**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

**비 전** 서민과 지역경제 서포터! 미래를 선도하는 시공간 디자이너!

| 전략목표 | 성과목표 |
|---|---|
| Ⅰ.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. | 1.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.<br>2.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.<br>3.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. |
| Ⅱ.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. | 1.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.<br>2.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 |
| Ⅲ.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. | 1.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.<br>2.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.<br>3.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. |
| Ⅳ.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. | 1.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.<br>2.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. |
| Ⅴ.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 | 1.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.<br>2. 건설현장 및 시설물,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. |

## 3. 전략목표별 성과보고

(전략목표 1)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.

| 성과지표 | 수도권 인구집중도 |
|---|---|

### □ 성과지표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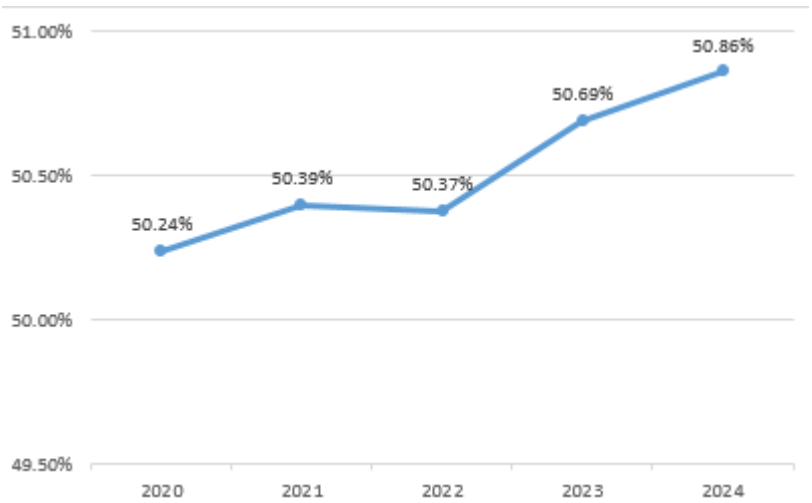
〈 수도권 인구집중도 〉

- **개념 :** 수도권 인구집중도
- **조사기관 :** 행정안전부
- **조사대상 :** 주민등록인구 (외국인 제외)
- **조사방법 :**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
- **측정산식 :**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주민등록인구 / 전국 주민등록인구

#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**수도권**의 **인구집중도**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'19년 **50%**를 **초과**하였고 '24년에도 **인구 집중**은 **지속**(50.86%)되고 있으며,

-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**정책의 조속한 성과 확산이 필요**합니다.



## □ 성과분석

○ 국토교통부는 “**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**”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“**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**”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를 위해, 균형발전을 위한 **혁신공간 기반조성** 및 **지원전략을 수립**하고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**산업 및 생활기반을 조성**하고 있습니다.

○ 첫째, **미래 혁신성장을 위하여 지역에 거점을 조성**하고 있습니다.

- **지방 대도시 도심**에 **복합 공간**(산업·주거·문화 등)인 **도심융합특구를 조성**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(도심융합특구법 시행 ‘24.4.25)하였고, 5개 광역시에 **도심융합특구를 지정**하고 **기본계획을 수립**(’24.11.7) 하였습니다.

- **산·학·연 협업**이 이뤄지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**캠퍼스혁신파크**를 추진하고 있으며, **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1호 혁신허브**를 준공(‘24.12)하였습니다.

- **기업이 자유롭게 개발·투자**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**기업혁신파크 조성**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사업성 개선, 절차 간소화 등 **제도를 개선**하고 선도사업 4곳(포항, 당진, 춘천, 거제)을 선정하였습니다.

○ 둘째, **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**

- **장관 주재 토론회, 지자체·지역연구원 설명회**를 개최하는 등 **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**에 착수하였습니다.

- **5차례 설명회 개최**를 통하여 **지자체·지역연구원**의 **초광역권계획** 수립 관련 **건의, 요청사항을 수렴**하고 **컨설팅을 제공**하였습니다.

○ 셋째, **지역의 미래첨단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산업거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**

- **기업 입주협약**('24.3)을 통해 충분한 **기업수요를 확보**한 **고흥, 울진 산업단지**는 **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**('24.6)되었고, 관계기관 **상생협약 체결** 및 용수, 전력 등 **인프라 관련 협의** 등을 통하여 **용인 국가산업단지**를 지정('24.12)하였습니다.

- **노후산단**의 문화·편의·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**활성화구역 사업지 1곳을 선정**하는 한편, **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**(3곳, '24.8)을 통해 산업단지 내 **인프라 등을 확충**하고 있습니다.

○ 넷째, **소외된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**하고 **귀향귀촌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**을 만들고 있습니다.

- 지방 중소도시에 **산업과 생활거점을 조성**하는 투자선도지구를 선정('24.7, 횡성, 음성, 천안)하여 **지역문화·특화산업 육성, 역세권 복합개발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**은퇴자, 청년들의 지역정착**을 지원하기 위하여 **8개 부처 공동** 공모를 통해 **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지**를 선정('24.5)하였습니다.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**도심융합특구 지정, 첨단국가산단 추진** 등 '24년 우리부는 **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**을 다져왔으며, 아직은 수도권 인구집중화 완화에 **뚜렷한 효과**를 가져오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.

○ 향후 우리 부는 **4대 초광역권**의 거점-연계 공간전략인 **초광역권 계획**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는 도심융합특구 등 **융·복합 거점**을 적재적소에 조성을 추진하고,

- 신규 **산업단지**와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**일자리 거점을 조성**함으로써 **성과를 가시화**하며,

- 낙후지역의 **문화 · 주거 · 교통 등의 격차를 해소**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**인구 유입을 활성화**하겠으며,

- **행복도시, 새만금, 제주국제자유도시**의 **조속한 추진 및 기능 강화**를 통해 **지역 성장**을 이끄는 **핵심거점**으로 육성하는 한편,

-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고려하여 **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유지**하되, 수도권의 **계획적 개발**을 통해 **기업애로는 해소**하고 **글로벌 경쟁력은 강화**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(전략목표 2)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.

**성과지표** | **①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**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**지표명**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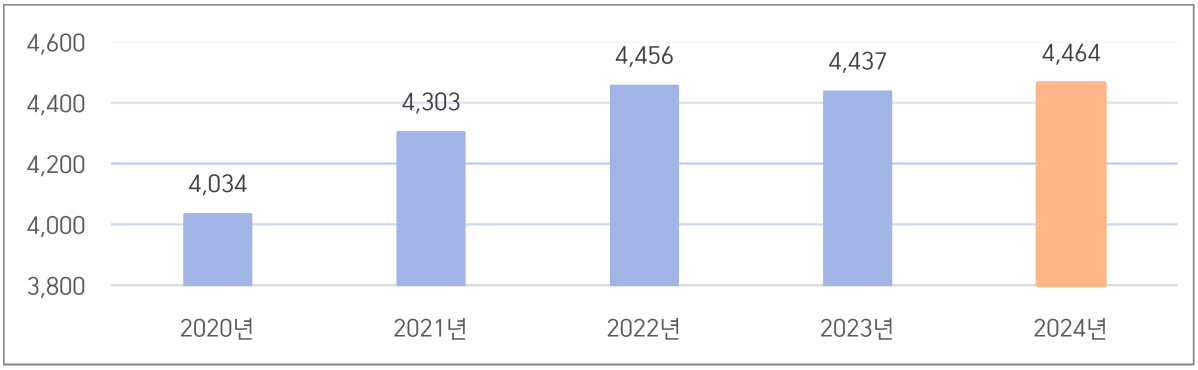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중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
  (소분류 기준 : 건물건설업,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)
- **조사기관 :** 통계청
- **조사대상 :** 전국 231,12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
- **조사방법 :** 면접조사 방식
- **측정산식 :**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자료 중 국토교통 소관 산업(건물건설업, 육상여객 운송업 등 표준산업분류 중 22개 소분류 업종)의 총 취업자 수를 합산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건설, 운수, 부동산 등 국토교통 소관분야의 '24년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446.4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.7만명 증가하였습니다.

- '23년은 **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위축** 등으로 취업자수가 0.4%p 감소하였으나, '24년에는 **수출경제 회복**으로 인한 **물류 수요 확대** 등으로 취업자수가 0.6%p 증가하였습니다.

< 최근 5년 국토교통 소관분야 취업자 수(단위: 천명) >



## □ 성과분석

○ 국토교통부는 **신산업**(로봇, 자율주행차, UAM 등) **확대**를 위한 **첨단 국토공간 조성** 및 **디지털 건설** 등 **혁신분야**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**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**를 통해 **근무 여건**을 **개선**하였으며,

- 특히, **첨단 모빌리티, 수소인프라 개발*** 등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이 **고부가가치 산업**으로 성장하고 **양질의 일자리**가 창출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*「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」 사업 추진('24.3월)
「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」 등 수소기술 평가 등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('24.3월)

○ 소관 업종별로, 건설업은 **건설기능인 역량강화**를 위한 **지원 확대** 및 숙련기능인력 배치 시범사업 확대, 중소·중견기업 대상 해외건설 현장훈련 선정·지원하는 등 **청년 건설인력 양성**을 도모하였고,

- 항공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** 및 지역별 찾아가는 일자리설명회, 항공사와의 Meet-Up 행사 등 **항공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**하고 있습니다. 특히, **'항공산업 JOB FAIR'**를 진행하여 청년x항공업계 상생 간담회부터 면접과 채용 상담 등 **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**했습니다.

* [행사개요] (기간) '24.9.27. / 인천국제공항
(주요행사) 채용면접/상담, 채용설명회, 토크콘서트 등

- 아울러 경영난이 심각한 시외버스·택시운송업 등 **특별고용위기업종 지원** 기간을 연장하고 **고용유지** 조치 및 **실업자 재취업, 근로자 생활안전 지원** 등 대상별 대응책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.

○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**수출경제 회복**으로 인한 **물류 수요 확대** 등으로 경제·고용이 일부 개선되어 '24년 국토교통 소관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.

* 국토교통 소관 취업자 수(천명): '23년 4,437 → '24년 4,464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‘25년도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회복의 부진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변동,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관련 고용 시장 위축 등 **고용불안 요소**가 내재되어 있으므로,

- ’29년 국토교통 분야 취업자 수(지표)는 **현 수준을 유지**하는 방향으로 일자리·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소관 업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**모니터링**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○ 건설 및 공간정보, 항공, 자동차 등 **전문 분야의 디지털 전환** 및 **창업 지원, 근로환경 개선**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고용량도 확대하겠습니다.

- 자율주행, 드론, 물류 등 **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및 상용화** 지원, **인프라 확대 구축, 규제 개선** 등을 통해 **신산업 일자리**를 창출하고 **혁신 인재 육성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**청년/취약 계층의 창업 촉진** 및 **구직자 지원**을 위해 창업지원 공간 제공, 창업 멘토링, IR 피칭 등을 지속 추진하고, **국토교통 혁신펀드**를 통해 미래 지향적 중소기업 투자·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고용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후속 조치로 **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**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,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하겠습니다.

| 성과지표 | ②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|
|---|---|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〉

- **개념 :** 수송, 보관 및 창고, 하역, 포장, 물류정보와 일반관리 등 물류서비스 활동에 따른 물류활동의 부가가치(value-added)와 국내총생산(GDP)을 비교하여 물류활동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정도 파악
- **조사기관 :** 한국교통연구원
- **조사대상 :** 물류 수송, 보관 및 창고, 하역, 포장, 물류정보 등 국가물류비용
- **조사방법 :** 국토교통통계연보(국토교통부), 운수업조사보고서(통계청),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),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(한국교통연구원) 등 각종 자료 확인
- **측정산식 :** 물류활동 부가가치/국내총생산(GDP) × 100%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**2024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2026년에 산출** 예정이며, 2024년도에는 **2022년** 기준 국가물류 **부가가치 비중**을 **산출***할 수 있습니다.

* 국가물류 부가가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~3년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약 5월에 발표(2024년도에는 2022년도 실적 발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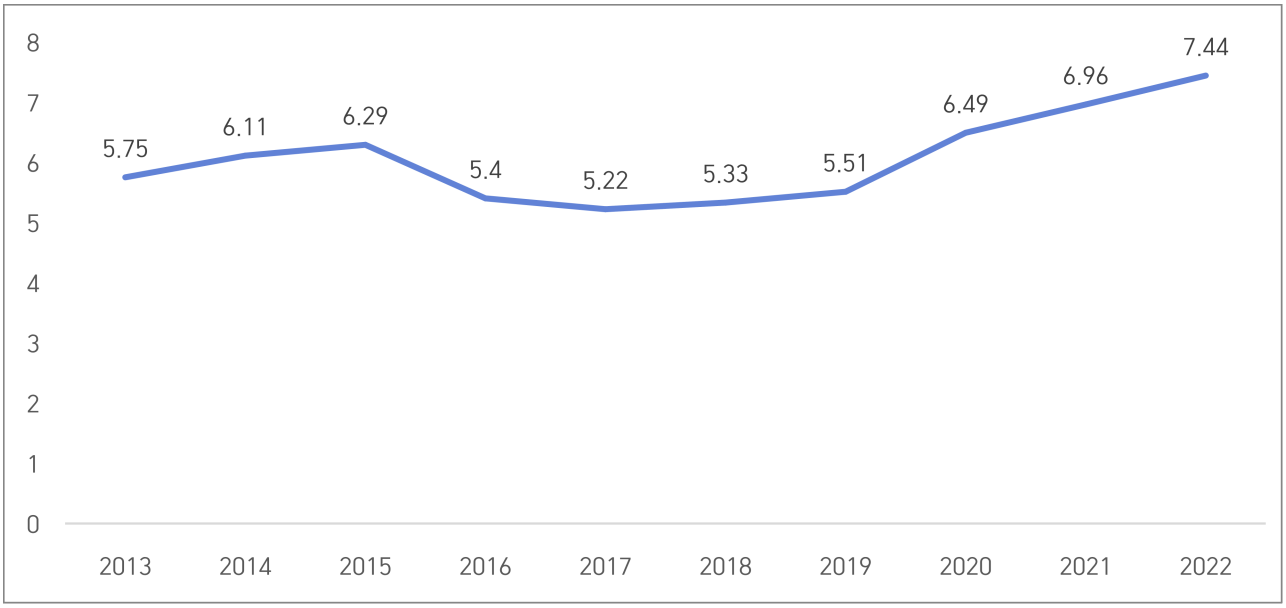
- **2022년도** 국제화물 수송비를 포함한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172,853십억원, 국내총생산(GDP)은 2,212,159십억원으로 **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7.44**로 산정되었습니다.

○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국가물류 활동의 규모적 수준을 국내총생산(GDP)과 비교·가늠하는 척도로서,

- 물류산업이 **국가 경제성장**에 **기여**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* (최근 10년) '13년 5.75 → '14년 6.11 → '15년 6.29 → '16년 5.40 → '17년 5.22 → '18년 5.33 → '19년 5.51 → '20년 6.49 → '21년 6.96 → '22년 7.44
(GDP디플레이터 기준연도 변경: 2015년 → 2020년)

<연도별 국가물류부가가치 비중>




## □ 성과분석

○ '22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은 **7.44%**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**2017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**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

- 이는 **GDP 디플레이터 기준**이 2020년으로 **변경과 COVID-19의 영향**으로 인한 **생활물류산업의 성장**에 따른 **물류산업 매출 증가**로 보입니다.

○ 2024년 3월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,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**「항공·해운·물류 발전방안」**을 **수립·발표**하였습니다.

- 동 발전방안은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"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"를 계기로 국민 참석자 분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**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**에 대해 **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마련**했습니다.

- **「항공·해운·물류 발전방안」**은 **"글로벌 국가 경제영토 확장"을 비전**으로 **글로벌 TOP10 물류강국, '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**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, **3대 추진 전략을 마련**했습니다.

- 주요 추진전략으로, **의왕ICD** 등 **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**를 통해 **국가 물류거점**으로 기능을 강화하고, 공항·항만·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물류 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·R&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'**국제물류특구**'를 **조성**하고자 합니다.

- **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구현**하기 위해 도서·산간 등에서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'**물류취약지역**'으로 **지정 및 관리**했으며,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**택배사**가 **공동배송을 실시**하도록 **허용** 등 **규제 완화도 추진**하고 있습니다.

- 도심 내 빠른 배송을 위해 **주문배송시설**(MFC) 등 **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대**하고, 택배의 집화·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**AI, 로봇 등 첨단 기술**을 적용한 '**스마트 물류시설**'에 **대출이자**를 **지원**했습니다.

○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, 지입제 폐단,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**화물운송산업이** 지닌 **구조적 문제점**을 **해결**하기 위한 「**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**」을 2023년 2월에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 **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**을 **요구**하거나 이를 **받는 행위**를 **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**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해 「**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**」을 개정('24.12)했습니다.

- 또한 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,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차량을 **불법튜닝 시 사업정지 처분**토록 화물차법 시행규칙 개정('24.12)했으며, 화물처리 행정정보 전산화를 위한 **"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"**을 구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도 발의('24.9)했습니다.

- 이를 통해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**지입제**를 **근본적으로 개선**하고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**지입료** 등만 **수취**하는 운송사, 즉, **지입전문회사를 퇴출**시키고자 합니다.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’27년 **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** 지표(’25년 기준)를 **7.9%**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**물류산업 지원정책**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*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5년간 목표치 :
’23(’21) 7.00 → ’24(’22) 7.30 → ’25(’23) 7.50 → ’26(’24) 7.70 → ’27(’25) ’7.90

-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**미래 역량**을 **확충**하는 한편, 지역 간 격차 없는 **보편적 물류서비스**를 제공하고, **종사자**가 **안심**할 수 있는 **사업 환경**을 **조성**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- **새벽·당일배송 확산**을 위해 **소규모 물류창고**인 **주문배송시설**이 **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**하고, **첨단장비 및 시스템**을 **도입**하여 **효율성·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**를 국가가 **스마트 물류센터*로 인증**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.

* 로봇, 고속화물기 등 첨단설비 및 IoT, AI 운영·제어시스템을 통해 입고·보관·집하·포장 등 물류 全 과정이 효율화·자동화된 시설

- 도서·산간지역에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**’물류 취약지역‘을 지정·관리**하고 **택배 공동배송 서비스 제공**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한 **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**하여 도심 내 불법 주·박차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, **배달 종사자** 안전을 위한 **공제보험상품**을 **제공** 및 **안전교육**을 **실시**하겠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정책 수립 및 성과를 바탕으로 **물류산업이 발전**하고 **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지표도 개선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전략목표 3)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.

## 성과지표 ①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

#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지표명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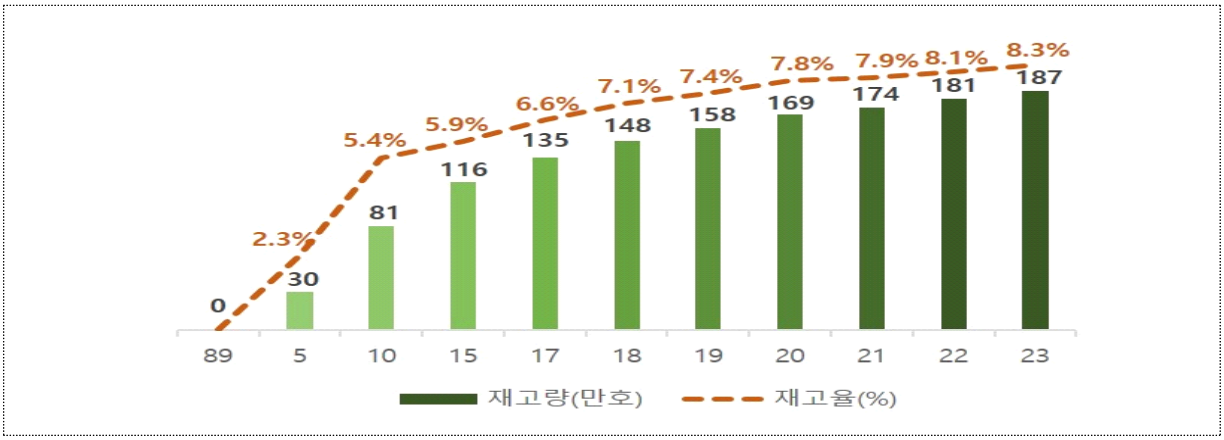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,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표현하는 지표
- **조사기관 :** 국토교통부
- **조사대상 :** 전국단위의 주택을 표본으로 조사
- **조사방법 :** 총 주택수(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), 장기공공임대주택 수(임대주택통계)
- **측정산식 :** 장기공공임대주택수(B)를 총 주택수(A)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

* 전년도 공공임대 재고 실적을 집계·분석하여 당해연도 연도말에 공표

### □ '24년 측정 결과

○ 소득별 ·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**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**하여,

- **'23년**에는 **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**이 **8.3%**('22년 8.1% 대비 0.2%↑)로 **OECD 평균**('20년 7.8%)을 **상회하였습니다.**



## □ 성과분석

○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, 신혼·출산, 고령 등 **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**을 **체계적**으로 **공급**하고 있습니다.

- **(청년)** 청년 1인가구 증가, 직주근접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맞춤형 시설·서비스가 결합**된 **청년특화주택 공모 최초 실시** 및 **일자리 연계형 주택**을 **지원**하였고

- **(신혼·출산)** **저출생 추세 반전**을 위해 **결혼과 출산**이 '패널티'가 아닌 '**메리트**'가 되도록 하는 "**주거지원 강화 방안**" 마련('24.6)하여 **신혼부부 특공** 확대, **신생아 우선공급** 신설 등 **주택공급 대폭 확대**하였으며,

- **(고령)** **초고령사회 대응**을 위해 **고령자복지주택**공공임대 확대(1→3천호)*, **실버스테이**민간임대 도입 등 저소득 층 뿐만 아니고 **중산층**도 **입주 가능**토록 **공급체계를 개선**하여 추진하였습니다.

* (기존) 건설임대 1천호 → (개선)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리모델링 각 1천호, 총 3천호 공급

○ 아울러, **주거복지 질적 혁신**을 위해 **공공임대 품질개선** 및 **제도 개선**을 통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.

- **(노후청사 복합개발)** **유휴 국·공유시설** 및 노후화된 **공공청사**의 복합개발을 통한 **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방안**('24.8)을 마련하여 ❶**사회초년생, 신혼·출산가구** 대상 **특화공급**, ❷**지역 맞춤시설** 설치(보육·의료 등), ❸**규제완화·인센티브**로 관계기관 참여 유도하였고,

- **(노후임대 재정비·시설개선)** **공공임대 노후화***에 선제적으로 **대응**하기 위해 **맞춤형 관리전략 수립**('24.12)을 하였고, 「**제2차 기본계획**」('24~'28)을 수립하여 냉방설비, 침수방지시설 등 **신규 항목 추가 반영** 및 **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신규 추진**하였습니다.

- **(제도도입)**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**든든전세*, 분양전환형**** 매입임대, **신유형 장기임대**를 신규 도입**하였습니다.

* 신축 비아파트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에 시세대비 저렴한 전세로 공급
** 매입임대 중 입지 등이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(6~10년)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
***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(100세대 이상)·장기간(20년 이상) 안정적으로 운영

○ **(청년 주택드림)** 청년의 **내집마련**을 위해 청년 **전용 청약통장**을 출시('24.2)하고, **전용 모기지** 연계 지원('24.12)하고 결혼·출산 등 **생애주기별 우대금리** 부여하고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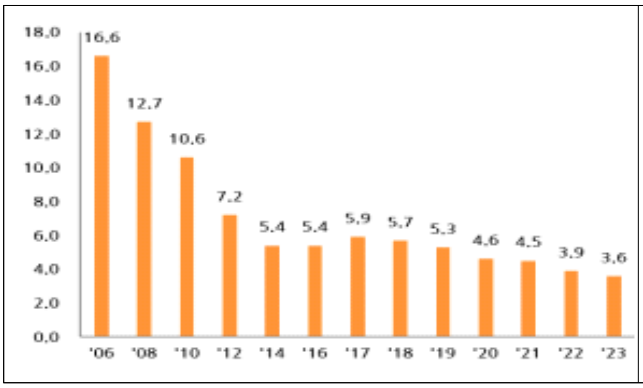
○ **(신혼·출산가구)** '결혼 패널티*' 해소를 위해 **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**('24.4, 민생토론회), **신생아 특례대출** 출시('24.1)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.

○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 노력이 다음과 같은 실제 서민 **주거 지표**의 **개선**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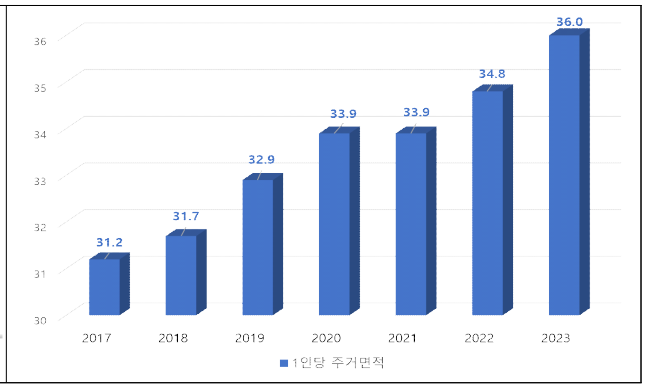
-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**'17년 5.9%**에서 **'23년 3.6%**로 **장기적인 감소 추세**에 있으며,

- **1인당 주거면적** 또한 **'23년 36.0m²**로 '17년 이후 **지속 증가 추세**에 있습니다.

**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**(%)




**1인당 주거면적**(m²)




* 주거면적은 '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,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**공공주택 100만호**(공공임대 50만호·분양 50만호) 공급계획('23~'27)에 따라 '25년도에는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.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.

*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공급('24~'25)

○ 사회초년생인 **청년들의 주거 안정**을 위해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**청년희망드림주택**을 공급하겠습니다.

* 공유지·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,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.6만호(든든전세, 신혼신생아)

○ 국가적 위기인 **저출산 극복**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**비율을 확대**(신혼부부 특공의 20% → 35%)하고, **공공분양주택**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**신설**하는 등 **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**을 **대폭 확대**하겠습니다.(연 7만호 → 12만호)

- 아울러,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**당첨 이력**을 **배제**하고, **출산**할 경우 **특별공급 기회**를 **1회 추가**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○ **고령화 추세**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**맞춤형 시설과 서비스**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**실버스테이** 공모(1.5천호)를 추진하고, 공공임대주택인 **고령자복지주택**도 **3천호 규모**로 공급하겠습니다.

| 성과지표 | ② 1인당 주거면적 |
|---|---|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1인당 주거면적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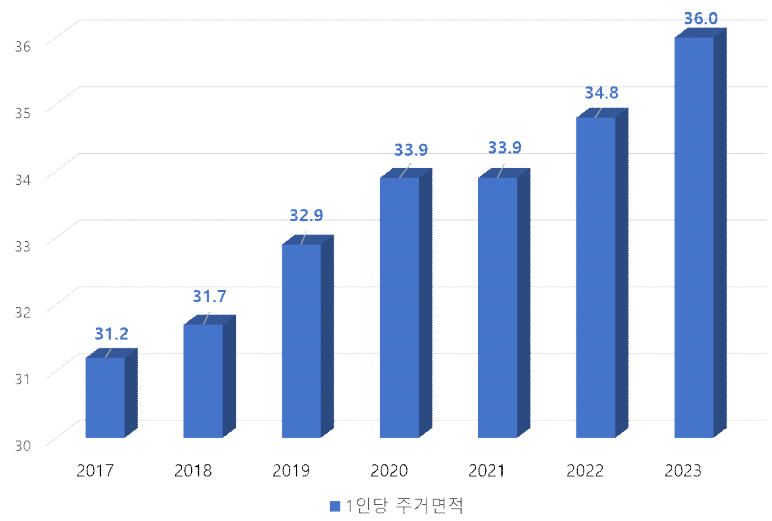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1인당 주거면적은 물리적 주거밀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, 국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
- **조사기관 :**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
- **조사대상 :** 전국단위의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
- **조사방법 :**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 면접조사
- **측정산식 :** 개별가구의 주택사용면적($S_i$)를 개별가구원 수($n_i$)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구하여 계산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**2023년 주거실태조사** 결과('24.12. 발표), **1인당 주거면적**은 **36.0㎡**로 **2022년(34.8㎡)**보다 **증가**하였습니다.

- '17년부터 건축물 **행정자료**를 **활용**하여 **집계**하였으며, **'17년 대비 1인당 주거면적**은 **15.4% 상향**되었습니다('17년 31.2㎡ → '23년 36.0㎡).

〈 1인당 주거면적 추이 (단위 : ㎡)〉



## □ 성과분석

○ 정부는 국민이 **원하는 곳**에 국민이 **원하는 주택**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**규제→지원으로 전환**하여 **민간**의 **공급기능**을 회복하고, **공공**의 **시장보완**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재건축 **패스트트랙*** 도입('24.12) 등 **정비사업 규제 합리화**, 특별법 시행('24.4) 및 1기 신도시 **선도지구 3.6만호 선정**('24.11) 등 **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**을 통해 도심 공급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.

* 안전진단 시기조정(사업인가 前),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

- **신규택지** 5만호 발표('24.11) 등 **공공 물량**을 **확대**하고, **미분양 매입확약** 제공 및 **先분양 허용** 등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**공급조기화**를 추진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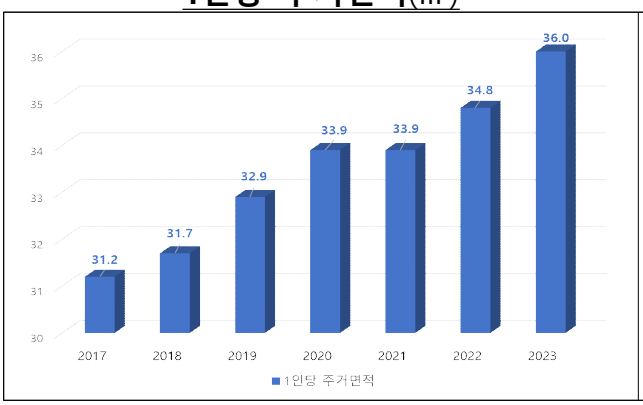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중산층을 위한 **든든전세, 분양전환 신축매입임대** 도입('24.8), **생애주기별 주거비** 지원* 등을 통해 **주거사다리**를 복원하였습니다.

*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('24.1),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('24.2), 청년월세 확대('24.4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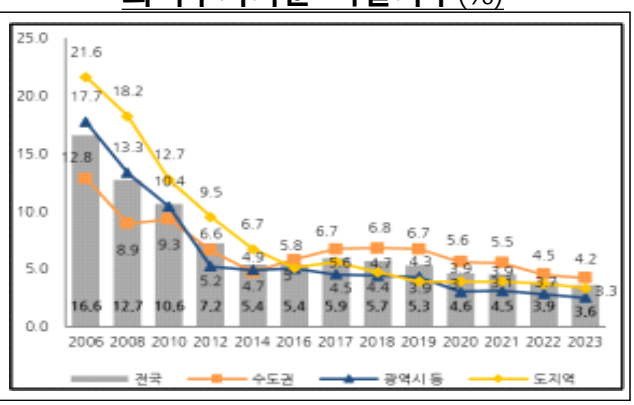
○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**1인당 주거면적**은 **지속적**으로 **증가**하고 있고, **'23년 36.0㎡**로 **목표치**('27년)에 **도달**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

- 또한, **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**도 '17년 **5.9%**, '19년 **5.3%**, '21년 **4.5%**, **'23년 3.6%**로 **지속 감소**하고 있습니다.

**1인당 주거면적**(㎡)




**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**(%)

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ㅇ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**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**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**맞춤형 주거지원**을 **강화**하겠습니다.

- 건설형 주택 **14만호 인허가**(당초 계획 13.5만호) 등 **'25년 공공주택**은 **역대 최대 규모**인 **25.2만호**를 신속 공급하겠습니다.

- 단기 입주 가능한 **신축매입임대**를 '25년까지 **11만호** 공급('24~'25)하고, **착공** 및 **입주자 모집 조기화**로 속도감을 제고하겠습니다.

* (조기 착공)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, (입주자 모집) 준공 후 → 착공 후 3개월

- 정비사업 **특례법 제정**, **리모델링 제도 개선** 등 정비사업 활성화, 1기 신도시 선도지구 **특별정비계획 수립**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**민간 공급기반**을 지속적으로 **확충**하겠습니다.

- **주거 선택권** 확대를 위해 **리츠** 등이 **장기간 안정적**으로 운영하는 **신유형 장기 민간임대**를 도입하겠습니다.

*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천호(실버스테이 1.5천호 포함) 공모 추진

-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 **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**(연 7→12만호),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**청년희망드림주택** 공급 등 세대별 **맞춤형 주택공급**도 **확대**하겠습니다.

(전략목표 4)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.

**성과지표** | **① 철도 연장**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**철도 연장**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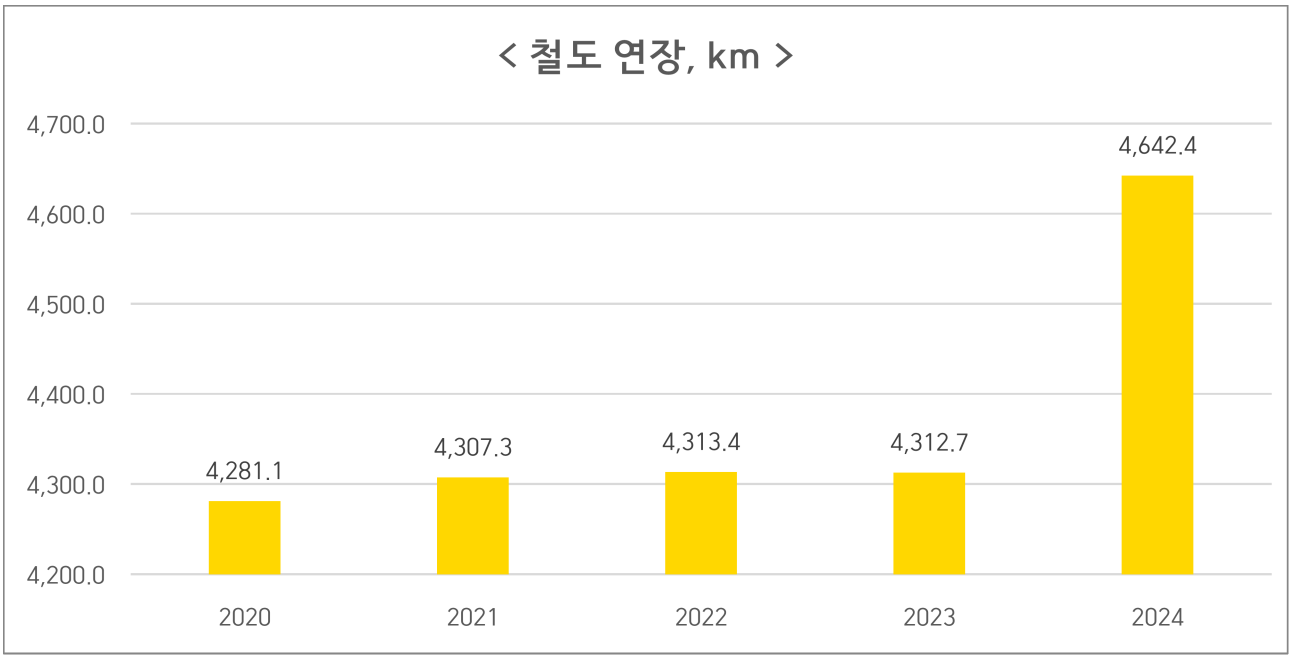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 개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연장 현황
- **조사기관 :** 코레일, SR 등 철도운영기관
- **조사대상 :** 전국 철도연장(고속, 일반철도 연장)
- **조사방법 :** 내부 통계 자료
- **측정산식 :** 전국 철도연장(고속, 일반철도 연장) 합산 * 철도키로 기준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'24년 철도국 개통 목표사업(GTX-A 등 9개소)을 모두 적기 개통('25.1)하여 '23년 대비 329.7km 증가한 **4,642.4km를 달성**하였습니다.

* '24년 측정결과는 **단순 준공 연장을 포함**한 것으로 **최종 통계 확정 시('25.下) 변동 가능**

-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.05%로 **지속 증가 추세**에 있습니다.



## □ 성과분석

○ **(1기 GTX)**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**수서~동탄 개통**('24.3)을 시작으로 **구성역**('24.6) 및 **운정중앙~서울역**('24.12)까지 **개통하였고, GTX 이용 편의**를 **제고**하고 보다 **많은 국민들이** 개통 효과를 **누릴 수 있도록**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**연계교통 강화 방안***을 시행하였습니다.

* GTX역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 신설·조정, 환승정차구역 설치, 주차장 추가 확보 등

- 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기존에 최대 80분 소요되던 **수서~동탄 간 이동시간**을 **21분으로 단축**하고, 최대 90분이상 소요되던 **파주 운정중앙~서울역 간 이동시간을 22분으로 단축**하였으며,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도 기대됩니다.

○ **(2기 GTX)** 수혜지역을 최대한 확대하면서도, 1기 GTX 노선을 보완할 수 있는 **2기 GTX**(A·B·C 연장, D·E·F 신설) **확충방안***을 **발표('24.1)**하였습니다.

* A·B·C 연장노선은 관련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협의하여 관련 절차 이행 중, D·E·F 신설노선은 지자체 설명회, 업계 간담회를 개최, 외부의견 폭넓게 수렴

○ **(수도권 광역철도) 대장-홍대선***은 **실시협약 체결**(6.18.)하였으며 **위례~과천선**은 **민자적격성조사**를 **통과****(11.7)하였습니다.

* 최근 15년 민자철도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(민자적격성조사~실시협약 3년반)

** '22.9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(KDI)를 진행, 경제성 확보를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통과

○ **(지방권 광역철도)** 교통분야 민생토론회(1.25)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 도입 발표 직후, **선도사업**을 **2건* 발굴**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.

* 대전~세종~청주공항을 연결하고 수도권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 민자적격성조사 착수('24.4~)
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(대구~신공항~의성)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타 중('24.6~)

- 그간 **수도권에만 운영**되던 **광역철도**를 **대구권(대경선)**에 **최초로 개통**('24.12)하여 **지방권**에도 **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.**

○ **(고속철도)** 평택~오송 2복선(400km/h), 인천발·수원발 KTX 사업('26), 호남고속철도 2단계('27) 등 5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.

○ **(일반철도) 서해선**('24.11), **중앙선**(제2경부선, '24.12), **동해선**('24.12), **중부내륙선**('24.11) 등 국가간선망을 개통하고, **여주~원주** 복선전철 **착공식을 개최**('24.1)하였습니다. **장항선, 포승~평택** 등 주요 거점 도시 연결망도 **개통**하였습니다.

* ①서해안 복선(90.0km), ②장항선(36.35km), ③포승~평택선(4.6km), ④중부내륙선 이천~문경(39.2km), ⑤중앙선 도담~영천(71.3km), ⑥동해선 포항~삼척(166.3km), ⑦포항~동해 전철화(172.8km)

- 또한,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**전라선고속화**('24.11),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**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**('24.1) 예타도 추진했습니다.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**(1기 GTX) 서울시** 등과 **협력하여 GTX-A 미개통 구간인 '삼성역' 무정차 통과**('26)와 **개통**('28)**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**

* 삼성역 무정차 통과('26) → 2호선 삼성역 환승 임시 개통('27) → 삼성역 개통('28)

- **GTX-B·C**는 용지 보상, 관련 인·허가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**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위해 노력**하겠습니다.

○ **(2기 GTX)** 5차 국가철도망 계획('25)에 반영 추진 후 **사업성이 확보되는 노선**부터 **단계적으로 추진**하겠습니다.

○ **(수도권광역철도)** '25년 내 **위례과천선** 제3자 공고 및 **수도권 서남부선**청학·광명~목동, **신안산선 2단계**여의도~서울역 **민자적격성조사 통과**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.

○ **(지방권광역철도)** ***x*-TX**(지방권 GTX) **선도사업**인 **충청권 CTX**(대전-세종-청주공항)는 **민자적격성 조사 통과**('25.下)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.

○ (**고속철도**) **수원발·인천발KTX 사업**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**'서해선~경부고속선 연결선'이 예타를 통과**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
○ (**일반철도**) 남해안 동서축 간선망 구축을 위한 '**보성~임성리**' 철도사업을 개통('25.8)하고, **천안~청주공항, 광주송정~순천, 대구산업선, 남부내륙철도, 수서광주** 등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.

| 성과지표 | ② 도로 연장 |
|---|---|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지표명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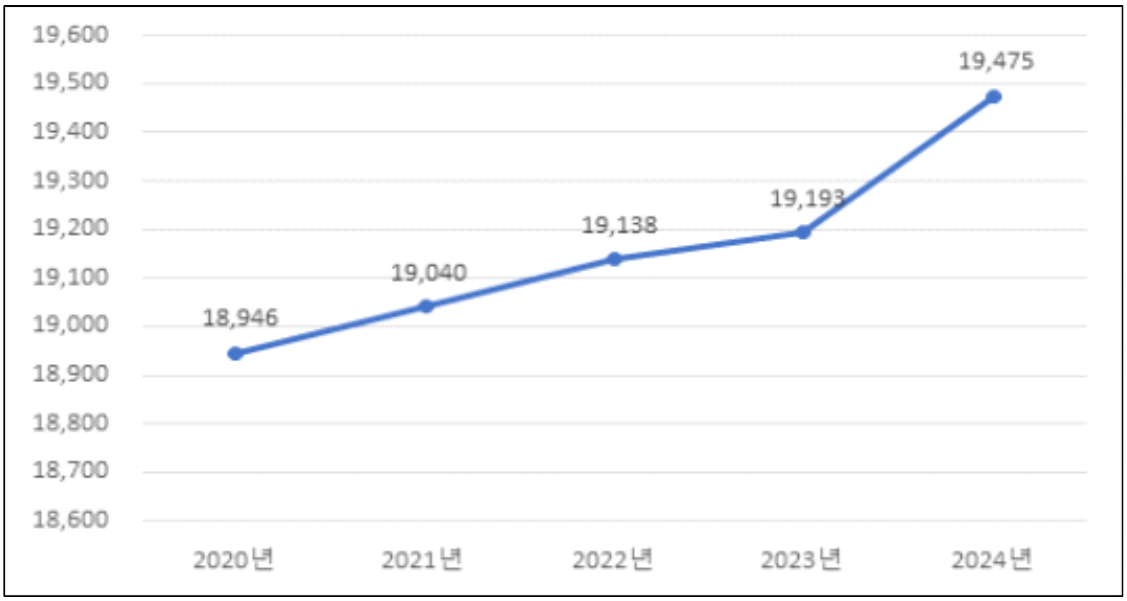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선도로망(고속 및 일반국도)의 연장 증가 현황을 표현하는 지표
- **조사기관 :** 전국 380여개 도로관리청의 도로 현황 통계 조사
- **조사대상 :**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의 도로 현황
- **조사방법 :**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(RSIS)을 통해 이듬해 1분기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도로 현황 통계 수집
- **측정산식 :** 도로관리청별 연장 현황을 합하여 계산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'24년 간선도로(고속 · 일반국도) 연장*은 19,475km(잠정)로, **'23년 대비 1.47% 증가**하였으며, **최근 5년간 연평균 0.55% 증가 추세**입니다.

* '24년 측정결과는 '24년 신설구간 준공 연장(282km)만 포함하였으며, 선형 개량 등에 따라 연장 증감이 있을 수 있음(최종 결과는 '25.5. 확정)

< 간선도로 연장 추이(단위 : km) >



## □ 성과분석

**국토균형발전**과 **경제 활성화** 지원을 위해 '24년도에 **고속도로 및 국도**를 **22건 개통**(388km)하여 **교통 접근성**을 **한층 강화**하였습니다.

○ (**고속도로**) 포천-화도민자 구간의 개통(28.7㎞, '24.2)으로 경인고속도로 개통('68년) 이후 **56년 만**에 **고속도로 5,000km 달성**하였으며,

- 안성-구리(72.2km, 12.31), 서부내륙(민자, 94.0km, 12.10) 등 **고속도로 5개 구간**(248.2km) **개통**을 통해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특히, **안성-구리**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 제한속도 **120km/h**로 운영하고 전구간 **배수성 포장**과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등 **첨단 안전기술**을 적용한 **차세대 고속도로**로,

- 서울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, 기존 경부·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완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**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-부여** 구간은 '서해안의 제2 대동맥'으로 평택항, 아산국가산단, 새만금 등 **주요 산업거점**의 **교통여건**이 개선되어 **지역 경쟁력 제고**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< '24년 개통 고속도로 주요사업별 효과 >**

| 사업명 | 연장km | 총사업비 | 개통 | 기대효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포천-화도 | 28.7 | 1조4,837억원 | '24.2 | (거리) 41.7km → 28.7km (△31%)<br>(통행시간) 35분 → 19분 (△46%) |
| 안성-구리 | 72.2 | 7조4,290억원 | '24.12 | (거리) 85km → 72.2km (△16%)<br>(통행시간) 61분 → 36분 (△41%) |
| 서부내륙<br>(1단계) | 94 | 3조2,688억원 | '24.12 | (거리) 132.0km → 100.0km(△24.2%)<br>(통행시간) 91분 → 65분 (△28.6%) |
| 파주-양주 | 24.8 | 1조4,357억원 | '24.12 | (거리) 25.0km → 19.6km (△22%)<br>(통행시간) 32.6분 → 15.3분 (△53%) |
| 창녕-밀양 | 28.5 | 1조6,805억원 | '24.12 | (거리) 42.1km → 28.5km (△32%)<br>(통행시간) 63분 → 17분 (△73%) |

○ 또한, 도로용량을 **입체적으로 확장**하여 **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**하기 위해 **지하고속도로** 사업을 **본격 추진**하였습니다.

- **경부(화성-서울) 지하고속도로 사업**이 **예비타당성평가**를 **통과**('24.8)함에 따라 실제 사업추진이 **가시화**되었으며, 해당 사업이 추진 될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**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의 접근시간 단축**이 예상됩니다.

  * (구간) 경부고속도로 기흥IC∽양재IC 26.1km (총 사업비) 3조 7,879억원

- 아울러, **경인선, 수도권 1순환선, 영동선, 부산외곽순환선** 등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 또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 * (경인) 인천~서울(15.3km, 재정), (1순환) 성남-구리(31.5km, 재정), 서창-김포(18.3km, 민자)
    (영동) 용인~과천(31.7km, 재정), (부산외곽) 사상-해운대(21.7km, 민자)

○ **(국도)** 제2안민터널(3월), 서북-성거(9월), 충청내륙1-1(7월), 국립생태원-동서천IC(7월) 등 **국도 17개 구간**을 **개통**(139.9㎞) 하여

- 지역의 **접근성 제고**와 함께 **상습 교통정체**와 보행자 등 **안전사고 위험 해소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< '24년 일반국도 개통 현황 >**

| 연번 | 사업명 | 시설규모 | 연장(km) | 총사업비 (억원) | 공사기간 | 개통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제2안민터널 | 4신설 | 3.8 | 1,807 | '16.04~'24.03 | '24.03.21 |
| 2 | 북일-남일1 | 4신설 | 5.6 | 1,997 | '17.02~'25.12 | '24.04.18 |
| 3 | 남면-정선2 | 2개량 | 2.7 | 432 | `17.07~`24.06 | '24.06.12 |
| 4 | 신촌-회천 | 4신설 | 4.2 | 687 | '20.4~'24.05 | '24.06.30 |
| 5 | 국립생태원-동서천IC | 4확장 | 8.1 | 855 | '17.07~'24.07 | '24.07.24 |
| 6 | 장암-임천 | 2개량 | 2.6 | 122 | '17.07~'24.07 | '24.07.24 |
| 7 | 충청내륙1-1 | 4신설 | 10.5 | 1,843 | '17.05~'24.08 | '24.07.25 |
| 8 | 남일-보은2 | 2개량 | 10.0 | 1,595 | '16.08~'24.09 | '24.08.23 |
| 9 | 서북-성거 | 4신설 | 4.4 | 1,343 | '17.04~'24.09 | '24.09.05 |
| 10 | 단양-영월 | 2개량 | 17.5 | 888 | '17.08~'24.10 | '24.09.12 |
| 11 | 영동-보은 | 2개량 | 20.2 | 1,068 | '16.08~'24.12 | '24.11.07 |
| 12 | 한기리-교리 | 2+1개량 | 10.1 | 499 | '16.09~'24.12 | '24.11.29 |
| 13 | 평택-오산 | 6확장 | 2.1 | 520 | '18.10~'25.02 | '24.12.16 |
| 14 | 팔탄-봉담 | 6확장 | 5.2 | 573 | '18.08~'25.02 | '24.12.24 |
| 15 | 청양-신풍 | 2개량 | 12.8 | 600 | '18.09~'25.04 | '24.12.27 |

| 연번 | 사업명 | 시설규모 | 연장(km) | 총사업비 (억원) | 공사기간 | 개통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 | 보령성주우회 | 2신설 | 5.3 | 659 | '18.03~'24.12 | '24.12.27 |
| 17 | 의령-합천 | 2개량 | 14.8 | 506 | '18.11~'24.12 | '24.12.31 |

○ (**신규공사**) 동광주-광산고속도로, 이동-서면국도, 진산-금산국지도 등 **14개 도로사업**을 **신규**로 **착수**하였으며,

* 고속 5개(24.1㎞, 9,103억), 국도 5개(18.4㎞, 3,084억), 국지도 4개(29.5㎞, 1,812억)

- 「제5차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('21~'25)」에 포함된 일반국도 **설계사업*(총 4건)**을 **착수(6월)**하는 등 간선도로망 확충을 **차질 없이 추진**하였습니다.

* 4건(신설·확장 2건, 시설개량 2건), 연장 20.9km, 총사업비 2,327억원

○ (**민자도로**) 민간 사업자의 **예측가능성 제고** 및 **사업 신속 추진**을 위해 **사업 추진 절차별 가이드라인 마련**(12월)하였습니다.

- **재정 여건, SOC 예산 감소** 등을 고려 시 민자사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**민자도로사업 활성화**가 필요하나

- 제3자 공고 및 협상 등 민자사업 과정*에서, 담당자별 **역량**이 **상이**하거나 **절차별 매뉴얼 등이 부족**하여 **분쟁, 절차 지연** 등 문제가 발생하는 **어려움**이 있습니다.

* (절차) 제안 → 타당성 검토 → **제3자 공고 → 우협지정 및 협상** → 착공
** (사례) 제3자 제안 공고시 차로수 등에 대해 미공고 → 종점부 왕복 2차로로 제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, 협상단계에서 분쟁 발생

- 따라서, 절차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**불필요한 쟁점**을 **사전**에 **해소**하여 **민자도로사업**의 **적기 추진**을 **지원하고 민간사업자**의 **애로사항**을 **저감**하였습니다.

* (제3자 공고 가이드라인) 최소한으로 공고되어야 하는 항목 및 조건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
* (협상 가이드라인) 협상 절차, 항목, 기간, 쟁점 해소절차 등 제시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**지역소멸에 대응**하고, **경제 재도약에 기여**하기 위해 **간선도로망을 지속 강화**하고, **투자효율성 제고방안**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계획 등에 따라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**간선도로**를 **1,091.1km 추가 확충***할 **계획**입니다.

- **새만금~전주**(동서3축)·**포항~영덕**(남북10축) 등 주요 고속도로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, **충청내륙고속화도로** 등 지역 숙원사업을 통해 **지역 산업단지**와 **관광 활성화**에 기여하겠습니다.

* (**재정고속도로**) 포항-영덕, 새만금-전주, 함양-울산 등 10개 사업 338.9km
(**민자고속도로**) 광명-서울 20.2km
(**일반국도**) 충청내륙고속화, 용진-우아, 신안-생비량 등 80개 사업 732km

**< 연차별 고속·일반국도 개통계획 >**

| 구 분 | | 합계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합계** | 연장(km) | **1,091.1** | **231.6** | **437.5** | **228.5** | **122.6** | **70.9** |
| **재정고속** | 연장(km) | **338.9** | **86.0** | **220.1** | **32.8** | **-** | **-** |
| | 사업 | **10건** | 포항-영덕 등 2건 | 함양–울산 등 6건 | 당진-천안 등 2건 | - | - |
| **민자고속** | 연장(km) | **20.2** | **-** | **-** | **20.2** | **-** | **-** |
| | 사업 | **1건** | - | - | 광명-서울 | - | - |
| **일반국도** | 연장(km) | **732** | **145.6** | **217.4** | **175.5** | **122.6** | **70.9** |
| | 사업 | **80건** | 충청내륙 등 18건 | 용진-우아 등 25건 | 신안-생비량 등 18건 | 청운-감연 등 11건 | 녹동-문산 등 8건 |

○ 차기 **국가간선도로망 수립 과정**에서 **광역생활경제권 지원, 지역 거점 추가 연결** 등 **지역 중심 도로망 적극 반영**('25)하고

- 지역 주요사업들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경제성 분석 기간 확대**(30→40년) 등 **타당성제고 방안 마련**하는 등 **사업추진 기반**을 더욱 **강화**할 계획입니다.

(전략목표 5)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.

## 성과지표 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

#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지표명 〉

- **개념 :**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
- **조사기관 :** 경찰청 통계(교통사고) 및 국토부·농림부 등 통계(자동차·농기계)
- **조사대상 :**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,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
- **조사방법 :** 경찰청 통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확인, 국토부(자동차)·농림부(농기계) 등 통계로 자동차 등록대수 확인
- **측정산식 :** ('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/ '24년 자동차 등록대수) × 1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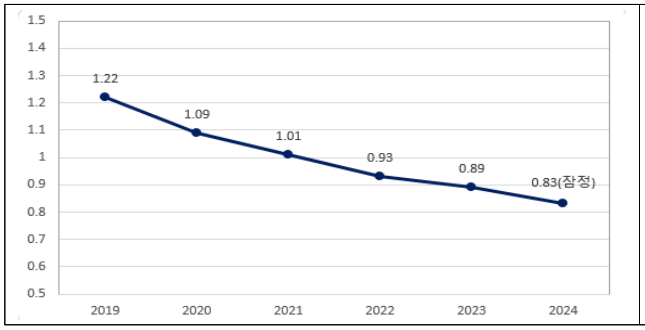
#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'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'는 **OECD 국제교통포럼**(ITF)에서 매년 발표하는 **교통안전통계**(Road safety annul report)의 **주요지표**로, 이를 통해 **국가 간 교통안전 수준의 객관적 비교**가 가능하여 교통안전도 측정에 적합한 지표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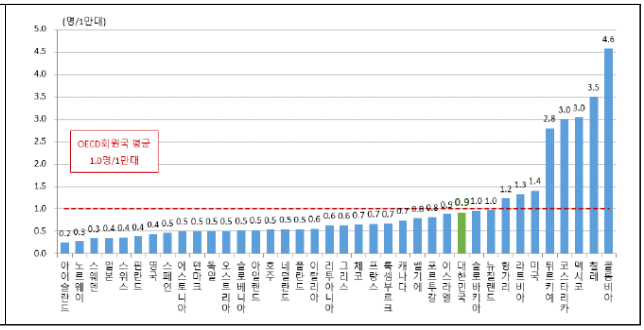
○ '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(잠정 2,500명대) 기준으로 **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**는 **0.83명**으로 예상됩니다.

- '19년 1.22명→ '20년 1.09명→ '21년 1.01명→ '22년 0.93명→ '23년 0.8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OECD국가 평균('22년 기준 1.0)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**<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>**




**<OECD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('22년 기준)>**



## □ 성과분석

○ (**성과**) 우리부 주도로 범부처 차원의 **「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」**('24.4)을 수립하였고,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**전방위적 관리**로 매년 **교통사고 사망자 수**가 **감소**하고 있습니다.

* '24년 교통사고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소(잠정 2,500명대 초반)

○ (**보행자**) 교통사망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**보행 사망자*** 감소를 위해 **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**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.

* '23년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, 전체 사망자(2,551명)의 34.7%(교통사고분석시스템)

- 자전거·PM 통행이 많은 **대학교 내 도로**를 **교통안전 관리대상**에 포함(교통안전법 시행, '24.8)하고 도로관리자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학 통행로의 **안전관리**를 **강화**하였습니다.

- **어린이 통학로 실태**(위험요인* 등)를 조사·분석(40개소)하여 마련한 **개선안**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**컨설팅 지원사업**을 시행하고, 찾아가는 어린이 **맞춤형 교통안전교육**(초등 3,995개교)을 실시하였습니다.

* 보도 단절구간, 불법 주·정차 차량, 교통안전표지 미비, 안전 시설물 파손 등

○ (**고령자**)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은 읍·면지역 주변 도로를 **마을주민 보호구간**으로 지정하여 **보행로·갓길 등을 정비**(67곳)하였고,

- 현재 국토부 훈령에 근거한 **마을주민 보호구간**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법제화**를 **추진 중**입니다.(도로법 개정안 발의, 24.7)

○ (**사업용차량**)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**버스·화물차** 등 **안전관리 의무**를 강화하고, 안전운전 유도를 위한 **시범사업**을 실시하였습니다.

- **화물차**(25톤 이상)**·트렉터**의 **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**(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, '24.10)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,

- **버스·택시** 운전자의 **운행 중 동영상 시청**을 **제한**하고 **위반 시 과태료** 부과기준(50만원)을 신설(여객차법 시행령 시행, '24.7)하였습니다.

- 차량 내 부착된 AI카메라가 졸음·과속 등 사고위험행동을 감지하면 경보음을 송출하는 **AI관제 시범사업**(시내버스 500대)을 실시하였습니다.

○ (**이륜자동차**) 배달종사자의 면허 유효성(정지·취소)을 확인하는 **운전자격 관리시스템**을 도입('24.7) 하였고,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**공익제보단***(5,500명)을 운영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.

* (신고항목) 보도 주행, 공동위험행위, 신호 위반, 보호장구 미착용, 중앙선 침범 등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(**목표**) 범부처 차원의 **'2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**을 수립하고 고령자·사업용차량 등 사고 **취약분야**의 **안전**을 **강화**하여,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.(0.83이하 달성)

○ (**보행자**) 보행자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이 많은 **대학교 도로**에 대해 **안전시설*** **설치·관리기준**을 마련('25.上, 지침 개정)하겠습니다.

* 과속방지턱, 도로반사경, 조명시설, 보행자용 방호울타리, 안전안내표지 등

- 국도 주변 **마을주민 보호구간**(47곳)에 보행로·횡단보도를 설치하고, 고령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**교통안전교육**(2,500회)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○ (**사업용 차량**) **고령 운수종사자**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'**자격유지검사**' 등 판정기준을 강화(여객차법·화물차법 시행규칙 개정, '25.上)하고,

-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**관제시스템 시범사업**(시내버스 200대, 통근버스 1,000대)을 **확대 추진**하여 운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
○ (**이륜차**)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크기 확대 등 번호판을 개선(시행규칙 개정, '25.上)하고, 배달업 이륜차 안전교육(3,000명)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(**교통안전 홍보**) 화물자동차 등 사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**온·오프라인*** **교통안전 캠페인**을 추진하고, **대상별**(고령자·어린이 등)·**시기별**(겨울철 등)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·추진하겠습니다.

* 공중파 방송, 라디오, 신문, 옥외 전광판 및 현장 캠페인, SNS 및 유튜브 등 활용

| 성과지표 | ②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|
|---|---|

## □ 성과지표 개요

〈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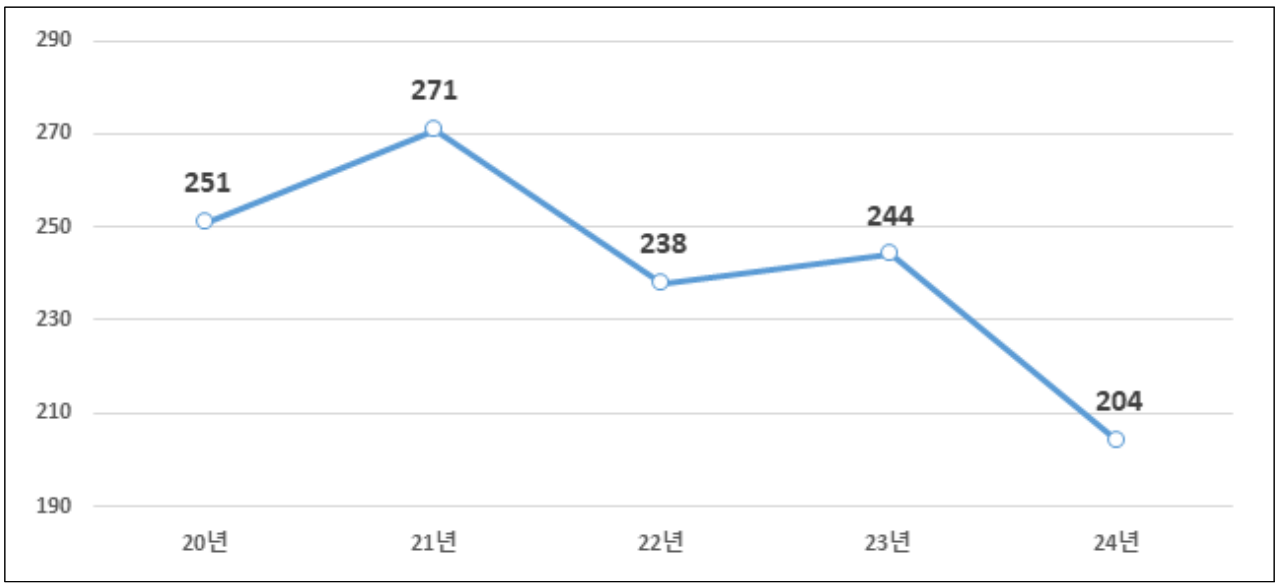
- **개념 :**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중 건설사고 사망자 수
- **조사기관 :** 국토교통부
- **법적근거 :**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
- **조사방법 :** CSI에 신고 접수된 건설사고 사망자 수
- **측정산식 :**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중 건설사고 사망자 수 합산

## □ '24년 측정결과

○ **'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**는 **204명**(잠정)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명(16.4%) 감소하여 **역대 최저치**를 **기록**하였습니다.

* ('20년) 251 → ('21년) 271 → ('22년) 238 → ('23년) 244 → ('24년) 204(잠정)

**<'20년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>**



## □ 성과분석

○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**취약시기별**(해빙기·우기·동절기) **정기점검** 5,808건을 포함하여 및 전문가 및 점검 일수 등 증가시킨 **정밀점검**(712건) 등을 **연간 상시 실시**하여 총 22,869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.

- 이중, 주요 건설 주체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**사망사고**를 **발생**시킨 시공능력평가 **상위 100대 건설사** 대상으로 **특별점검**(397개소)을 실시하였습니다.

○ 특히, 올해에는 건설사고, 지반침하사고 수습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 24년 4월 30일에는 **경기 시흥 시화 MTV 교량 붕괴사고**가 발생하였습니다.

- 건설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·외부전문가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**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**(5.3~7.1)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* 마련,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**요청**(10.27)하여 **건설안전**에 대한 **경각심**을 **제고**하였습니다.

* 사고사례 전파, 거더 제작 및 거치시 붕괴사고 사례 등 안전교육, 거더인양 방법 안전성 등 거더 시공시 안전방안 체크리스트

- 이후 사고의 재발방지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해 타 부서와 합동으로 **PSC 거더 횡만곡 기준정립** 및 향후 설계시 구조검토 의무화, 거더 형식별 형고비(거더 높이/길이)에 대한 권고안 등 관리기준 마련하여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**8월 29일 서울 연희동**과 **9월 21일 부산 사상구**에서 **지반침하 붕괴사고가 발생**하였습니다.

- 지반침하 사고 이후 정부·지자체·민간전문가로 구성된 「**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**」를 운영(‘24.9~12)하여 국조실장·차관님 주재 회의(8회) 및 지반탐사 장비(GPR) 기술검증 워크숍을 개최

(11.14~15)하였고 **굴착공사장 94개소**에 대해 **3단계 특별점검**을 실시(’ 24.10~12)하여 **10월 이후 대형사고를 제로화**하였습니다.

- **고위험지역 탐사주기 단축**(연2회) 등 집중관리를 위하여 「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( ‘25~’ 29)」을 수립( ‘24.12)하여 지**하안전 체계**의 **강화기반**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 건설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「**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TF**」를 **구성**(11.15)하였고, TF 회의(3회)를 통해 획기적인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(11.20)하는 등 **제도개선・교육・홍보・점검** 등 **추락사고 예방대책 마련**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**사고사례**를 **분석**하여 지자체, 현장 등에 **컨설팅 실시** 및 관련 **자료**를 적극 **배포**하는 등 **역량 제고** 및 **안전 문화 확산**에 힘쓰고 있습니다.

- **중소규모 현장**에 대해 **안전 컨설팅** 실시(1246개소) 및 **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**(159개소), 점검 역량 등이 부족한 지자체에 152회의 **안전 코칭사업**을 실시하는 등 목표치*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.

* (’24년 목표) 컨설팅 1,200건, 지자체 코칭 100건, 스마트 안전장비 130개소

- 또한, 건설사고 사례 3D영상 제작(5회), 건설안전가이드 책자(3만부), 리플릿(6만부), 건설안전 슬로건 현수막(7,600개) 등 **홍보물 배포**, **웨비나 개최**(4회)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현장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.

○ 위의 성과 등을 통해 <u>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기준 건설사고 사망자</u>가 **<u>204명</u>**(작년 244명 대비 △16.4%)으로 <u>**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**</u>하였습니다.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시행 중인 안전 관련 **제도**의 **현장이행**을 보다 **강화**하고, **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**을 통해 **사망자 감축 기조를 유지**토록 하겠습니다.

○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('23.12) **대책**들을 **조속히 이행**하고, 건설현장 및 지자체에 대한 교육 등 **지원사업**을 **지속 실시**하겠습니다.

- 특히,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**국가인증 감리**를 **육성·관리**하고, 상시 감독 기능강화를 위하여 **영상기록장치 의무** 설치 등 **모니터링 체계**를 **구축**, **시·도지사 및 국토안전 관리원**의 현장 안전관리 권한 강화 등의 과제를 **지속 추진**하겠습니다.

○ 이와 동시에 전국 **건설현장 2.2만여 개소**를 일제 **점검**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설사고 등 **위법행위**에 대한 **엄중처벌**하여 참여자의 **경각심**을 **제고**하고 및 **견실 시공**을 **유도**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'24년 **건설사고 통계** 및 고위험 공종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**건설사고 리포트**를 발행하여 발주청, 인허가기관, 기업 등 **모든 건설주체**가 **참고**하여 **건설사고 저감**에 **활용**토록 하고,

-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**사고발생 비율**이 **높은 공법**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**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**점검**에 **활용**할 계획입니다.

○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**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**도 **지속 추진**하여 '25년에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**200개소**에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